

편 집

이내영(EAI 여론조사센터 소장)
이성봉(고려대 정치외교학과 BK21 연구교수)
정원철(EAI 여론조사센터 부소장)

연구원

신재혁·이현지·강우창

기획·자문 – 신 정부 정책평가 위원회

- ▣ 위원장 : 임현진(서울대 사회학)
- ▣ 위 원 : 김 균(고려대 경제학), 김병국(고려대 정치학), 김용호(인하대 정치학), 박재완(성균관대 행정학), 송호근(서울대 사회학), 윤영철(연세대 신문방송학), 이내영(고려대 정치학), 이종수(한성대 행정학), 이종화(고려대 경제학), 이주호(KDI 국제대학원 경제학), 전주성(이화여대 경제학), 정진영(경희대 정치학), 하영선(서울대 외교학).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

국민여론과 전문가 평가

목 차

■ 발간을 축하하며	2
■ 요약문	3
I. 서론	8
II. 국민여론 : 기대에서 실망으로	11
III. 국민여론 : 노무현 정부 지지층 변화	19
IV. 정책 분야별 전문가 평가	27
V. 요약 및 분야별 정책제언	36
■ 설문지	43

발간을 축하하며

EAI <EARS>시리즈의 첫 번째 작업으로 기획된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EAI가 <EARS>를 발간하기로 한 것은 민주 정치에서 차지하는 여론의 중요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민주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정 현안과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의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개별정책에 대한 국민 다수의 선호는 민주정부로 하여금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좌표가 될 것이며,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향후의 국정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EAI는 2003년 1월에도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정책선호를 조사하여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1년 간의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을 정리하고 분석한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들과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묻는 내용이었다. 여론은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국정평가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척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정보와 전문성의 부족으로 객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문가들의 분석을 포함시켜 세부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와 분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 1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교육, 언론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세한 분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와 관련 학자들에게 유익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도 EAI는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그 결과를 <EARS>시리즈를 통해 발간해 낼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와 책의 발간에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지원해 준 중앙일보에 감사를 드린다. 여론조사 항목을 설계해 주신 임현진 교수를 비롯한 EAI 정책평가위원들과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원고를 작성해주신 이내영 교수, 이성봉 연구교수, 그리고 신재혁, 이현지, 강우창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AI 원장
김 병 국

요약문

1. 보고서의 목적

이 보고서는 2004년 2월에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노무현 정부 1년 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분석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들과 정책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반인 여론조사는 1,006명을 표본으로 하여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알아보았다. 전문가 여론조사에는 정부 22개 부처 행정관리관실에 소속된 자문그룹과 각 부처 평가위원 1,178명 중 252명이 참여하였다.

이 보고서의 일차적인 목적은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충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 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라가 운영되기 바라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 보고서는 여론 조사를 통해 나타난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고려하면서 앞으로 노무현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고치고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선호도를 알아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론은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미와 한계를 고려하면서 향후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참고하여야 할 시사점을 검토한다.

2. 여론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

기대에서 실망으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3년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국민들은 평균 70점, 전문가는 평균 56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의 국정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일반 국민들은 평균 31점을, 전문가들은 평균 29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높은 기대와 지지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으로 돌아서는 ‘기대-실망’의 사이클을 보여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는 그 폭이 과거 다른 정부에 비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매우 짧은 시기 동안에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한국의 상황이 1년 전에 비해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의 64%, 일반 국민들의 80%가 작년에 비해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이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전문가의 10%만

‘대체로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좋아졌다고 평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갈등조정 메커니즘의 결함

노무현 정부에서 ‘탈중앙’과 ‘권한 분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분산’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정치·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의 메커니즘에는 많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참여의 심화, 권위의 분산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권위주의적, 일방적 조정 메커니즘을 해체시켰지만, 새로운 갈등조정 메커니즘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정책평가에서 ‘효과적인 국정시스템 구축’,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관계’ 등의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도 이 두 항목은 각각 1위(70.9%)와 3위(43.6%)에 올랐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북핵 및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사이에 정책협의를 조정이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70.5%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회·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노사분규가 한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적 과제에서 3위(응답자의 46.3%), 사회적 과제에서 2위(응답자의 30%)에 올라 있지만, 정작 그 해결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80.5%의 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장애요인으로서 노사분규를 꼽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정책 및 갈등 조정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의 해결과정에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지난 1년간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역시 매우 부정적이다.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누구의 책임인가’하는 질문에 대해 정치 분야 전문가의 54%가 대통령을, 29%가 야당을 꼽았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북한 핵 및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 정책협의를 조정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던 70%의 전문가들 중 71%가 그 원인을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찾고 있다.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사회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67.5%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한국사회의 이념 대립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대통령의 코드 정치’를 꼽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관의 교차

앞으로 ‘1년 후의 한국 상황’을 전망하라는 물음에 35%의 전문가와 47%의 일반 국민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에 25%의 전문가와 32%의 일반 국민들은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별 차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각각 40%와 2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 1년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국민들의 32%와 전문가의 25%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과

방식에 비판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지난 1년에 대해서는 크게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점차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품는 것이 근거 없는 낙관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에 많은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3. 정책 분야별 국정 수행 평가 결과

출범 1년 만에 노무현 정부에 등을 돌린 민심은 국정운영의 어떠한 점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분야별로 국정수행 점수를 추출하였다.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은 정치·행정, 외교·안보, 교육·언론, 노동·복지, 금융·재정, 기업·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25점에서 40점 사이의 점수를 주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제일 잘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일반인들의 53%, 전문가의 55%가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각 정책 분야별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분야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국민 참여의 확대’, ‘지방 분권’, 그리고 ‘대통령의 탈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한국의 정치적 풍토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관계’, ‘효과적인 국정시스템 구축’, 그리고 ‘지역정치 타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권력집중과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민주 정부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화와 효율성이라는 덕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책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난 1년 동안의 정국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견해차 보다는 대선자금을 비롯한 정치적인 문제들로 대통령과 국회의와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어왔고, 명분에 얽매인 의견대립과 서로의 입장을 설득하고 이해할 조정메커니즘·리더십의 부족으로 이 같은 갈등이 악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외교·안보분야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대해서만 약간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칠레 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68.2%가 ‘잘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잘했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미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만 ‘잘했다(38.5%)’는 응답이 ‘잘못했다(31.9%)’는 응답을 다소 넘어섰을 뿐, 한미 정상회담(잘못했다 43.2%, 잘했다 15.9%), 주한 미군 재배치 및 감축(잘못했다 40.9%, 잘했다 22.7%), SOFA개정(잘못했다 25%, 잘했다 15.9%) 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분야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은 단순히 정책 집행의 실패 혹은 무능이 아니라, 정책 내용 자체가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의 70.5%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한미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답변하였지만, 한미관계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0%의 전문가들이 ‘미국탈피 자주외교’를 원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바람직

한 한미관계의 방향이라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와 노무현 대통령의 견해, 적어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견해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 분야

경제 분야의 개별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만 약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이슈들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실업, 경기 진작,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중 '잘했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제 분야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이 우선인가, 분배가 우선인가라는 물음에 82.9%의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도 '매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88.8%나 되었다. 향후 4년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었던 '실업', '경기 진작' 등을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 이미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합의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노무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회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비교적 나은 평가를 받은 분야이다. 총 12개의 평가 대상 항목 가운데 4개의 항목에서는 평균값이 플러스 점수로 나타났으며, 8

개의 항목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 지방분권, 여성의 사회 진출,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실업구제/고용안정, 근로자 생활안정, 노사자치/분규조정, 빈곤해소 등 경제 정책과 연관된 분야에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결국, 정치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 분야도 노무현 정부가 기존 질서를 '해체'는 했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조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전혀 발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국사회의 안정화 정도와 발전 역량 혹은 사회의 총체적 능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안정해졌다'와 '퇴보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사회 분야에서 향후 4년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2가지 선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가 실업구제를 선택하여 결국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언론 분야

'브리핑제 도입 및 기자실 개방'과 '인터넷 국정브리핑 신설'이라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언론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인터뷰 사전 신청, 사후 보고', 그리고 '기자와 공무원의 비공식 접촉 제한'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언론사를 상대로 한 '대통령의 소송 제기'와 '언론 담당 정책결정자 인선'을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점은 노무현 정부의 언론관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일부 언론의 적대적 관계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에게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응답자의 80%가 노무현 정부가 언론사의 정

치적 성향을 이유로 언론사를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평가했지만, 동시에 90%의 응답자가 언론사 역시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정파를 편향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송 역시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응답자의 90%가 공영 방송이 노무현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유력 일간지(조·중·동)에 대한 방송사의 비평프로그램(미디어비평-MBC, 미디어포커스-KBS)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60%에 달했다.

교육 분야

교육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수교육 및 교육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그 외의 10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사교육비 경감 대책', '공교육 내실화', 그리고 '대입제도 개선' 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공교육 내실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54.8%로 가장 많았으나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항목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결론

노무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일반 국민들과 각계 전문가 모두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 중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당파적 이익과 전체 국민의 일반 이익을 조화시킴으로써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일이다. 지난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지역과 세대, 이념에 따른 국민들 사이의 균열이 극심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부담한 갈등 조정의 과업은 이전 대통령들에 비하여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노무현 정부는 이처럼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국정 수행에 실패함에 따라 세대와 이념, 지역, 그리고 계층에 따른 국민들 간의 분열은 더욱 심화되고,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모두 현 정부에 대해 실망하게 되었다. 특히 지지 기반의 와해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력을 상당히 약화시키면서 국정 수행의 모멘텀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노무현 정부의 위기가 앞으로 더욱 가중된다면 국민들의 개혁 열망은 자칫 정치 불신이나 회의감으로 변질될 수 있고, 이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노무현 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합의(consensus)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1년에 대해 국민들은 커다란 실망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앞으로 나아지지 않겠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노무현 정부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일반 국민들과 정책 전문가들의 평가를 기초로 하여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갈등과 반목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1. 보고서의 목적

이 보고서는 2004년 2월에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분석한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들과 정책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정서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복잡한 현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더불어 정책 분야별로 해당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EAI와 중앙일보는 지난 2003년 1월에도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정책적 선호를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는 2003년 2월 초 <중앙일보>에 3회에 걸쳐 기획특집으로 소개되었고,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동아시아연구원)이라는 단행본으로도 출간되었다. 따라서 이번의 여론조사는 그 후속편으로서,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에 국민들이 가졌던 기대와 희망이 지난 1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 역시 <중앙일보>에 2004년 2월 19일부터 2월 26일 사이에 7회에 걸쳐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여론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일차적인 목적은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충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라가 운영되기를 바라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교육, 언론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세부 정책과 현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정책 담당자들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일시적인 '여론'이 아닌 정책 전반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보고서는 여론 조사를 통해 나타난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고려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노무현 정부가 고치고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론 조사의 결과는

응답자의 선호도를 알아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 정치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도외시키고서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여론은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이다. 국가의 정책이 여론의 흐름에 매몰되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할 수 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의 평가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보다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역시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시각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직접 국정을 수행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미와 한계를 고려하면서 향후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여론조사 방법과 설문 내용

이번 여론조사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1,006명의 일반 국민들을 표본으로 하여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알아보았다. 2004년 2월 2~3일에 전화 조사의 방법을 사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포인트이다.

설문 항목은 노무현 정부의 1년간의 국정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알 수 있는 항목, 정책분야별 평가, 그리고 응답자의 정치 성향을 알아 볼 수 있는 항목 등 총 16개로 구성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1년간의 국정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가졌던 기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1년 전과 비교한 현재의 한국 상황, 향후 1년 후의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전망,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정책분야별 평가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분야와 제일 잘못된 분야를 선택함과 동시에 각 정책분야별로 업무 수행을 얼마나 잘했다고 평가하는가를 물었다. 예시한 분야는 정치·행정, 외교·안보, 기업·통상, 금융·재정, 노동·복지, 교육·언론 등 6개 분야이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정치 성향별로 노무현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는지, 2004년 4월 총선에서 어느당을 지지할 예정인지, 그리고 응답자의 이념적 성향 등에 대해 물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2004년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전화조사와 e-mail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여론조사의 항목 설계는 14명의 교수가 참여한 EAI의 '정책평가위원회'가 담당하였다. 전문가 여론조사에는 정부 22개 부처 행정관리관실에 소속된 자문그룹과 각 부처 평가위원 1,178명 중 252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교수, 국책연구위원, 기업인, 시민단체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로는 정치·행정 55명, 외교·안보 44명, 경제 41명, 사회 40명, 언론 30명, 교육 4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이념적으로도 보수 38명, 진보 35명, 중도 28명으로 나타나 이념적으로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설문에는 일반 국민들에게 물었던 문항과 더불어, 응답자의 전문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평가수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각 정책 분야별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세부 정책의 성공 정도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와 같은 공통적인 설문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책 분야별로 특별한 현안이 있거나,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분야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가 성장과 분배 중에서 어느 부분에 앞으로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국가의 모델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등과 같은 설문을 제시하였고,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계개혁을 추진할 경우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 등의 설문을 제시하였다.

3.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총 V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II장에서는,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난 1년 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

리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노무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제III장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의 지지층 중 누가, 왜 이탈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정치적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제IV장에서는, 정책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정치·행정, 외교·안보, 경제, 사회, 언론, 교육 등 6개의 분야로 나누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더불어, 앞으로 어떠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지도 다룰 것이다. 제V장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책 분야별로 특별한 현안이 있거나,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분야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가 성장과 분배 중에서 어느 부분에 앞으로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국가의 모델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등과 같은 설문을 제시하였고,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계개혁을 추진할 경우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 등의 설문을 제시하였다.

3.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총 V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II장에서는,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난 1년 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

리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노무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제III장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의 지지층 중 누가, 왜 이탈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정치적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제IV장에서는, 정책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정치·행정, 외교·안보, 경제, 사회, 언론, 교육 등 6개의 분야로 나누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더불어, 앞으로 어떠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지도 다룰 것이다. 제V장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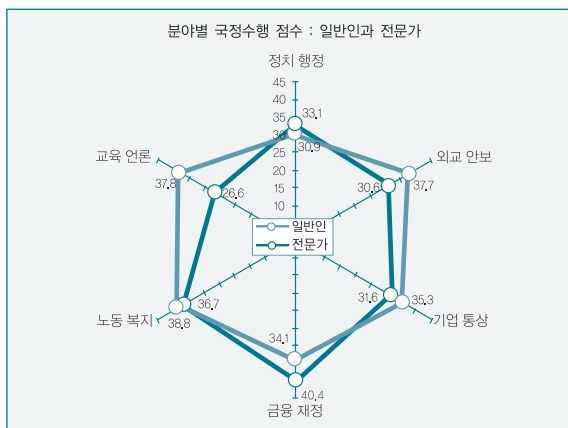
2. 무엇이 문제인가?

1) 정책의 실패

출범 1년 만에 노무현 정부에 등을 돌린 민심은 국정운영의 어떠한 점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분야별로 국정수행 점수를 추출하였다.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은 정치·행정, 외교·안보, 교육·언론, 노동·복지, 금융·재정, 기업·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25점에서 40점 사이의 점수를 주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일반인들의 53%, 전문가의 55%가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각 분야별 세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는 [그림 II-6]과 같이 나타났다. 이 그림은 최고점을 50점으로 최하점을 -50점으로 하여 각 분야별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치화한 것이다.

[그림 II-6] 분야별 국정수행 점수



각 분야별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평가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정책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분야별 세부 이슈에 대한 총 33개의 설문 중에서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11개임에 반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22개로 나타났다.

둘째, 노무현 정부에서 ‘탈집중’과 ‘탈권위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갈등조정’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들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국민 참여의 확대’, ‘대통령의 탈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국정시스템 구축’이나 ‘대통령과 국회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사회 분야에서도 ‘지방분권’, ‘여성의 사회진출’,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빈곤대책’, ‘노사갈등’, ‘근로자 생활안정’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커다란 실망을 드러냈다. 이처럼 대통령의 탈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참여의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참여 세력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메커니즘에는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다양한 정치세력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세계개혁’이 유일할 뿐,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혹평을 받고 있다. 특히, ‘신용불량자대책’, ‘경기진작’, ‘실업대책’은 각각 -32점, -35점, -38점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사회분야에서 노무현 정부가 최하점을 받은 ‘근로자 생활안정’, ‘빈곤대책’, ‘노사문제’ 등도 결국은 경제적 상황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그림 II-7] 분야별 전문가 국정 운영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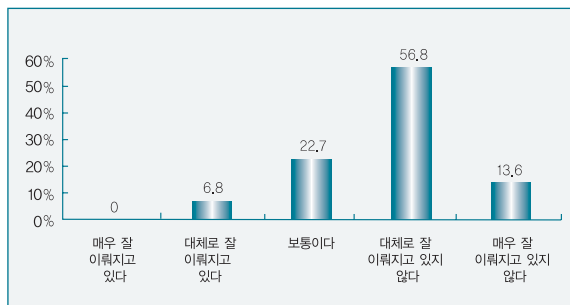


2) 갈등조정 메커니즘의 결함

출범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정 운영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명칭 역시 ‘참여정부’로 내걸었다.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정부의 ‘권한 분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분산’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정치·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의 메커니즘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참여의 심화, 권위의 분산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권위주의적, 일방적 조정 메커니즘을 해체시켰지만, 새로운 갈등조정 메커니즘은 여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1년 참여정부의 정책 평가에서 ‘효과적인 국정시스템 구축’,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관계’ 등의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도 이 두 항목은 각각 1위(70.9%)와 3위(43.6%)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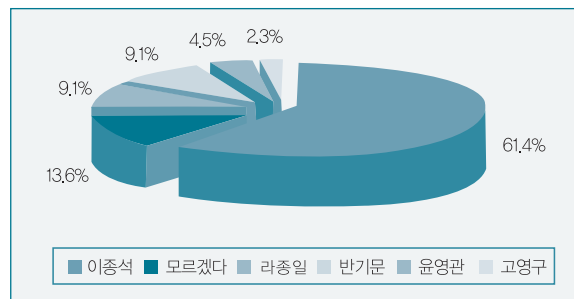
[그림 II-8] 북핵 및 한미동맹 부처간 정책조정



외교·안보 분야에서 ‘북핵 및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사이에 정책협의를 조정이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70.5%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정부 부처 사이의 정책협의 및 조정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고위 당국자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61.4%가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꼽았다는 점이다. 운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라종일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4.5%와 9.1%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북핵 문제나 한미동맹에 관한 실무협상은 외교통상부의 몫이다. 그러나 정작 외교통상부의 수장이었던 운영관 전 장관은 정책을 주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협상에 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작 권한은 없는 외교통상부와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권한만 가지고 있는 NSC와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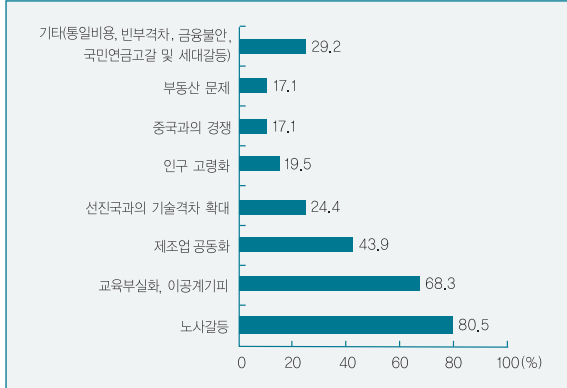
[그림 II-9] 외교·안보 조정자는 누구인가?



갈등조정 메커니즘의 결함에 대한 인식은 사회·경제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노사갈등이 한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적 과제 중 3위(응답자의 46.3%), 사회적 과제 중 2위(응답자의 30%)에 올라 있지만, 정작 그 해결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80.5%의 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장애요인으로서 노사갈등을 꼽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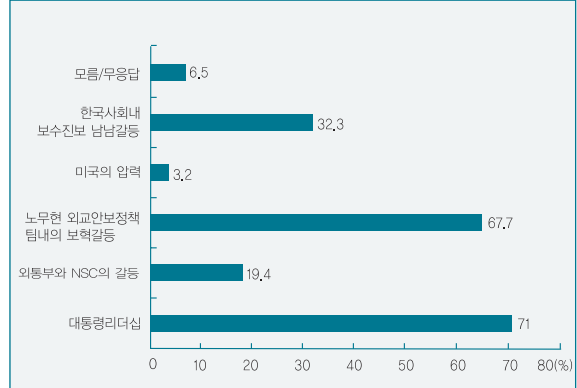
[그림 II-10] 경제발전의 장애 요인

(복수 응답)



[그림 II-12] 부처간 조정 실패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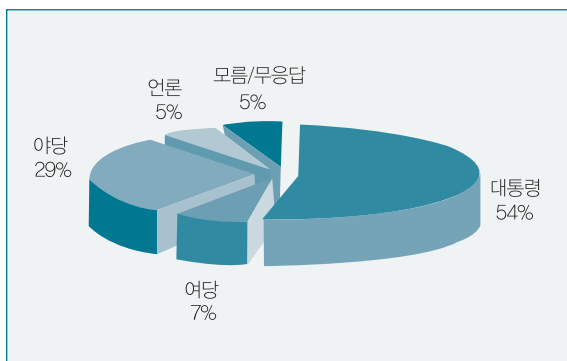
(복수 응답)



3)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것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및 갈등 조정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의 해결 과정에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지난 1년간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 현재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인식마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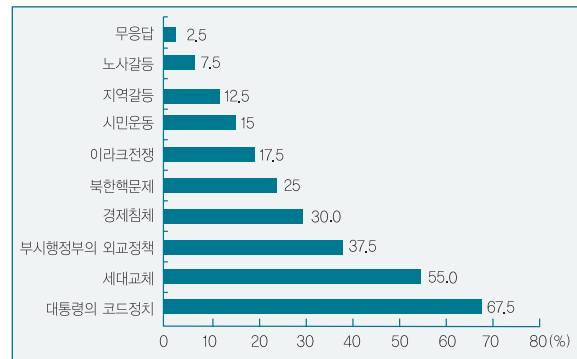
[그림 II-11] 대통령과 국회 대립의 책임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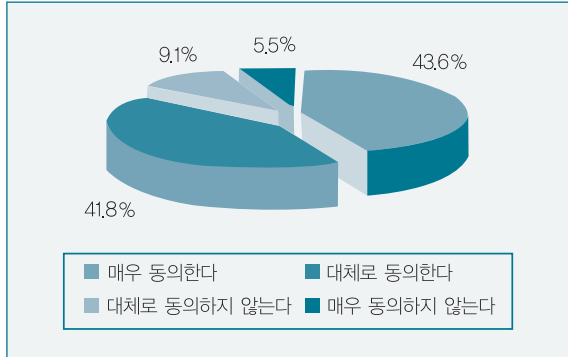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정치 분야 전문가의 54%가 대통령을, 29%가 야당을 꼽았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북한 핵 및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 정책협약의 조정 및 조정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던 70%의 전문가들 중 71%가 그 원인을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찾고 있다.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사회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67.5%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한국사회의 이념대립에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요인 중 하나로 '대통령의 코드 정치'를 꼽고 있는 것이다.

[그림 II-13] 이념 대립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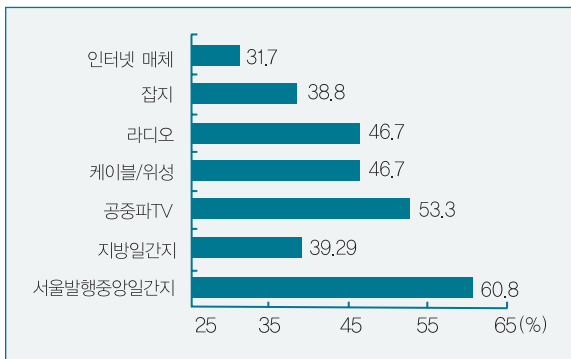
[그림 II-14] 노무현 대통령의 포퓰리즘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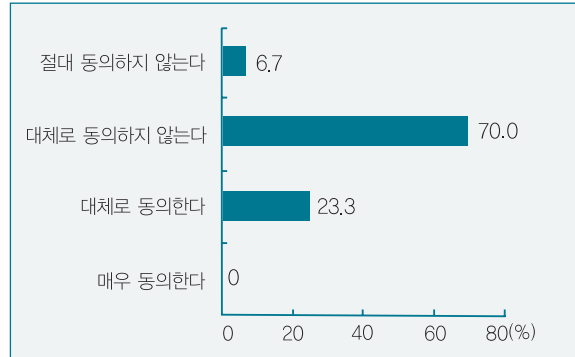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노무현 대통령이 포퓰리즘적 성향이 강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5.4%가 동의한다고 답변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유지해온 인터넷 매체 활용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인터넷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신뢰도가 유난히 낮은 것도 결국은 인터넷이 노무현 대통령의 포퓰리즘적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I-15] 매체의 신뢰도 평가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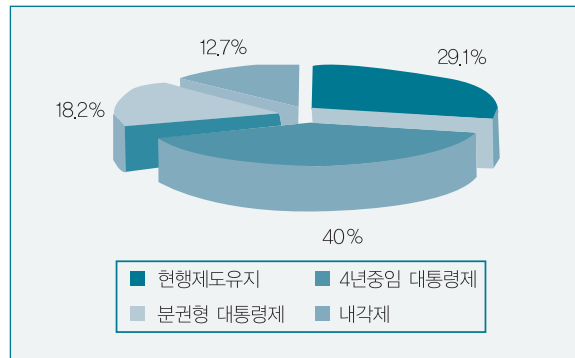


[그림 II-16] 대통령의 인터넷 활용정책 지지도



갈등 조정 시스템의 결함과 노무현 대통령의 포퓰리즘적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대통령제 개헌 논의로 이어진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치 분야 전문가의 70.9%가 개헌에 찬성함으로써 대통령제 개정이 현재의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I-17] 개헌론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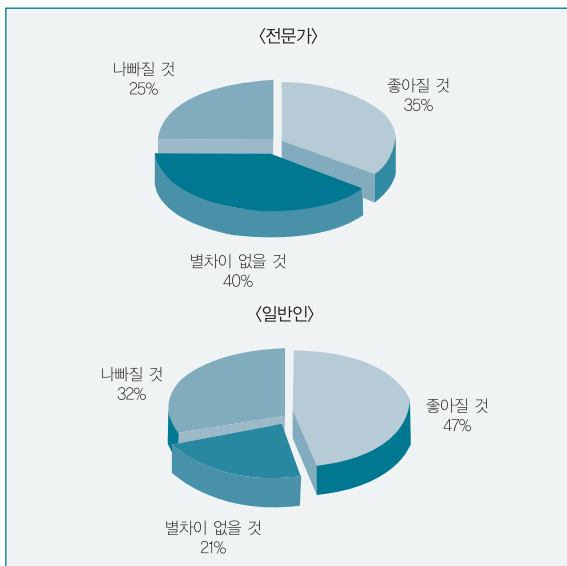


3. 미래에 대한 전망

노무현 정부의 1년에 대해 국민들은 커다란 실망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봤다. 앞으로 '1년 후의 한국 상황'을 전망하라는 물음에 35%의 전문가와 47%의 일반 국민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에 25%의 전문가와 32%의 일반 국민들은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별 차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각각 40%와 21%로 나타났다.

임기 동안에 많은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정비와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경제 분야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강구를 시작으로 지난 1년의 실패를 경계삼아 남은 임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그림 II-18] 1년 후 한국 상황 전망



이러한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 1년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국민들의 32%와 전문가의 25%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무현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과 방식에 비판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년은 크게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점차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품는 것이 근거 없는 낙관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는 남은

III. 국민여론 : 노무현 정부 지지층 변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쉽지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었다. 지역주의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왔던 민주화 이후의 이전 대통령 선거들과 비교하여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세대와 이념의 균열이 뚜렷하게 정치경쟁의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세대와 이념에 따라 유권자가 갈라지는 현상은 지역정당체제로 표현되어 온 한국의 왜곡된 정당 경쟁 구조를 이념과 정책에 따른 정당 경쟁체제로 재편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롭게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바람을 충족시키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유권자들을 유인하는 과업을 실현하는 것이 이전의 정부들보다 훨씬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에게는 국민들 사이의 세대와 이념에 따른 갈등이 정당 간의 경쟁으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정당체제의 해소를 촉진하여야 하고, 지지자의 당파적 이익과 국민 전체의 일반 이익을 조화시킴으로써 지지 세력을 공고화함과 동시에 반대 세력을 포섭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들이 주어졌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지난 1년 간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1년 만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 정치는 정부가 새롭게 출범할 때 국민들이 가졌던 높은 기대가 실제적인 통치(governance)의 미숙으로 인하여 실망으로 바뀌는 이른바 ‘기대-실망의 사이클’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경우 기대와 실망간의 간극이 상당히 크고, 기대로부터 실망으로의 전환이 너무나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국민들의 실망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 현 정부의 실패는 자칫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실망은 시급히 치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들 가운데 누가, 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일이 절실하다.

이하에서는 먼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의 정도를 개관하고, 현 정부에 대한 지지로부터 이탈한 유권자들이 누구인가를 16대 대선 지지 후보와, 세대, 이념, 지역별로 살펴본 후, 이들이 지지를 철회한 이유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와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를 구분 짓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끝으로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살펴볼 것이다.

III. 국민여론 : 노무현 정부 지지층 변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쉽지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었다. 지역주의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왔던 민주화 이후의 이전 대통령 선거들과 비교하여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세대와 이념의 균열이 뚜렷하게 정치경쟁의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세대와 이념에 따라 유권자가 갈라지는 현상은 지역정당체제로 표현되어 온 한국의 왜곡된 정당 경쟁 구조를 이념과 정책에 따른 정당 경쟁체제로 재편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롭게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바람을 충족시키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유권자들을 유인하는 과업을 실현하는 것이 이전의 정부들보다 훨씬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에게는 국민들 사이의 세대와 이념에 따른 갈등이 정당 간의 경쟁으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정당체제의 해소를 촉진하여야 하고, 지지자의 당파적 이익과 국민 전체의 일반 이익을 조화시킴으로써 지지 세력을 공고화함과 동시에 반대 세력을 포섭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들이 주어졌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지난 1년 간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1년 만에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 정치는 정부가 새롭게 출범할 때 국민들이 가졌던 높은 기대가 실제적인 통치(governance)의 미숙으로 인하여 실망으로 바뀌는 이른바 ‘기대-실망의 사이클’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경우 기대와 실망간의 간극이 상당히 크고, 기대로부터 실망으로의 전환이 너무나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국민들의 실망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 현 정부의 실패는 자칫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실망은 시급히 치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들 가운데 누가, 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일이 절실하다.

이하에서는 먼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의 정도를 개관하고, 현 정부에 대한 지지로부터 이탈한 유권자들이 누구인가를 16대 대선 지지 후보와, 세대, 이념, 지역별로 살펴본 후, 이들이 지지를 철회한 이유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와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를 구분 짓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끝으로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살펴볼 것이다.

1. 누가 지지를 철회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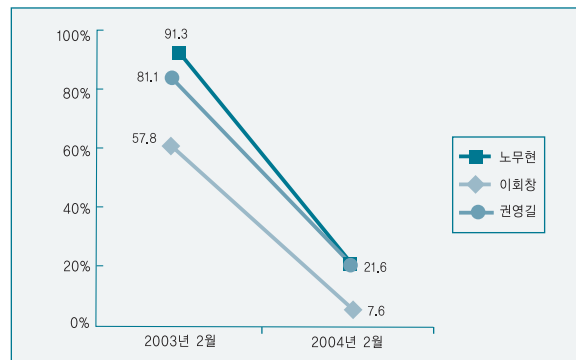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균열의 범위와 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지역균열에 더하여 세대와 이념균열까지 가세하여 국민들 사이의 분화가 크게 나타난 2002년 대선 정국을 고려한다면, 노무현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갈등 구조를 정부가 적절하게 관리(management)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출범 1년 후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크게 하락하였다. 국민들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급속하게 전환된 것이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급증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유권자 가운데 어떤 이들이 지지를 철회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난 2002년 16대 대선에서 지지한 후보별로 유권자들의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의 변화를 관찰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가장 적게 실망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이 가장 크게 실망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을 당선시킨 유권자들의 실망의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의 [그림 Ⅲ-1]을 보면, 취임 당시인 2003년 2월에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국정 수행을 잘해 나갈 것이라고 응답하였던 유권자의 비율은 노무현 지지자 가운데에서는 91.3%, 이회창 지지자에서는 57.8%, 권영길 지지자는 81.1%로 단연 노무현 지지자들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그런데 1년 후인 2004년 2월에는 노무현 정부가 현재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

의 비율이 각각 21.6%, 7.6%, 21.6%로 낮아졌다. 이러한 지지도의 변화를 측정해 보면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의 69.7%가 이탈함으로써 가장 큰 변화의 폭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취임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던 유권자들이 1년 후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 Ⅲ-1] 대선 후보 지지자별 국정 운영 평가 변화



주: 지지도의 변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의 지지율과 1년 후의 지지율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하였던 유권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지지하여 당선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하여 처음부터 매우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실망에 따른 변화의 정도가 가장 큰 것은 자연스럽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의 급증이 반대 세력의 증가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지지 세력의 감소로 인하여 초래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 정부는 자기 지지 기반의 와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가장 크게 이탈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유권자 가운데 20~30대의 젊은 세대, 정치 이념적으로 진보, 지역적으로는 호남의 지지 이탈 정도가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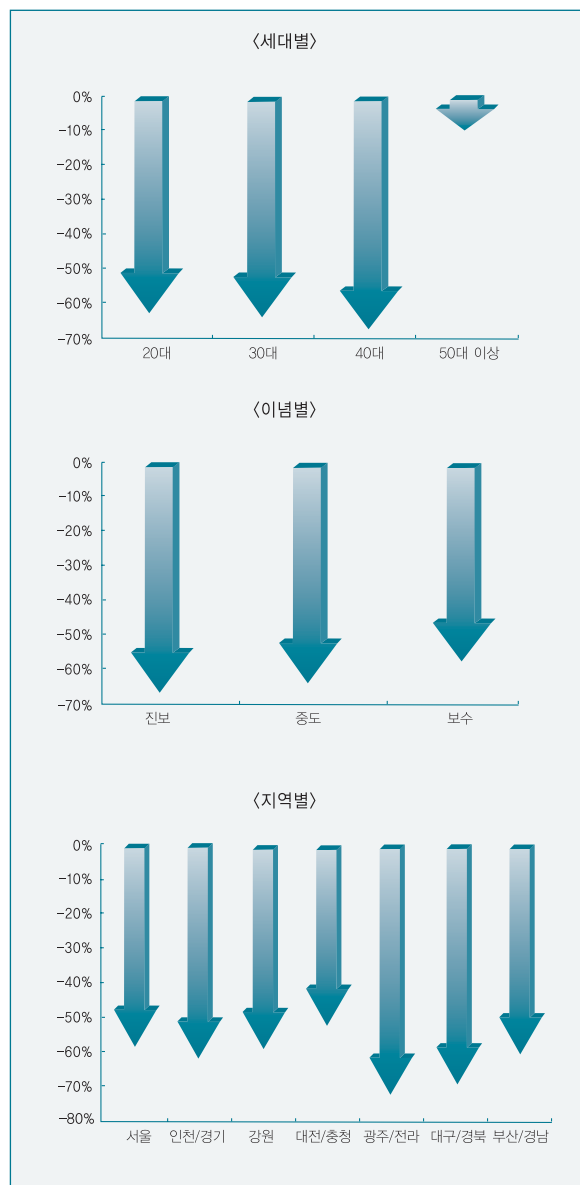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그림 Ⅲ-2]는 각각 세대와 이념, 지역별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세대별로는 30대와 40대의 지지도가 가장 크게 줄어들었고, 40대의 실망이 가장 늘었다. 그러나 50대 이상의 경우도 비록 하락도가 8.5%에 그치고 있지만 출범당시 지지도가 20.5%였음을 고려해 본다면 그 낙폭이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념별로는 진보의 지지도가 가장 크게 줄었으나 실망의 증가폭은 진보와 중도, 보수 모두 비슷하다. 끝으로 지역별로는 예상한대로 호남의 이탈도가 가장 크고, 대구·경북의 이탈 규모도 상당히 크다. 한편 실망의 증가폭 역시 호남과 대구·경북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첫째, 노무현 정부는 지지 세력의 공고화에 실패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젊은 세대와 진보, 그리고 호남의 유권자들이 가장 크게 이탈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노무현 정부는 중간 세력과 반대 세력의 포섭에 실패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젊은 세대와 진보, 그리고 호남의 유권자들이 가장 크게 이탈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노무현 정부는 중간 세력과 반대 세력의 포섭에 실패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중간 세력은 중간 세대인 40대, 중도, 비호남·비영남 유권자들이고, 반대 세력은 50대 이상의 나이 든 세대, 보수, 영남의 유권자들과 말할 수 있다. 비록 지지 세력과 비교하여 변화의 폭은 다소 작지만 이들 역시 지지 이탈의 정도나 실망의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 특히 중간 세대인 40대의 실망이 가장 크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한다. 20~30대 젊은 세대와 50대 이상 나이 든 세대 간의 대결로까지 해석되었던 지난 대선에서 40대의 선택은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매우 큰 기여를 하였다.

더구나 사회의 각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 가장 크게 실망하였다는 것은 현 정부의 실제 국정 수행의 실패(혹은 governance의 부재)가 그러한 실망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림 Ⅲ-2] 국정 운영 평가 하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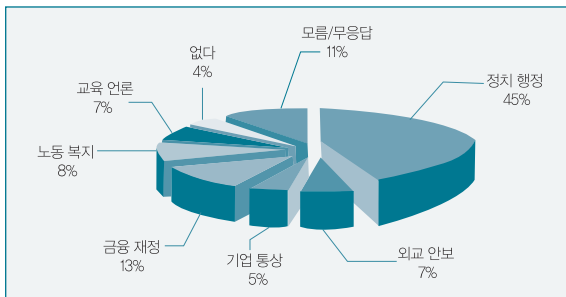


주: 지지도의 변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의 지지율과 1년 후의 지지율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2. 왜 지지율이 하락하였는가?

노무현 정부는 지지 세력을 공고화하는 데 실패하고, 중간 세력과 반대 세력의 포섭에 실패함으로써 출범 1년 만에 지지율이 급락하고 실망이 급증하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이 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우선 노무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응답한 국민들이 가장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정책 분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지난 대선에서의 지지 후보와 세대, 이념,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림 Ⅲ-3]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못된 정책 분야



주: “노무현 정부가 현재 국정수행을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서 “매우 잘못했다”와 “대체로 잘못했다”라고 응답한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림 Ⅲ-3]은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현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정책 분야를 나타낸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失政)은 정치·행정 분야이다(45%). 그 뒤를 이어서 금융재정(13%), 노동복지(8%), 교육언론과 외교안보(7%), 기업통상(5%)의 순으로 현 정부의 실정 분야를 꼽고 있지만 정치·행정 분야와의 격차가 상

당히 크다. 하지만 정치·행정 분야의 실정이 국민들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결론내리기에는 아직은 성급한 감이 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과 중간 세력, 반대 세력 간에 현 정부의 실망스러운 정책 분야에 대하여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선 지지후보, 세대, 이념,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의 [그림 Ⅲ-4]는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 실망한 유권자들을 각각 대선에서의 지지 후보와 세대, 정치이념, 지역별로 나누어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강원 지역에서 금융재정 분야라고 응답한 유권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가장 잘못된 정책 분야로 정치·행정을 꼽는 이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행정 분야의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취임 초기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개혁과제는 국내정치(34.5%)와 관료/행정(24.8%) 분야였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에게 기대를 걸었던 개혁 과제들의 해결에 실패한 것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행정 분야 가운데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취임 당시 국민들이 꼽은 정치 분야 최우선 개혁과제가 정경유착 근절(41.3%)과 권력구조의 개편(28.3%), 정당민주화(19.2%)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불법 대선 자금 수수와 측근 비리과 같은 정치 부패 문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등 정치개혁의 제도화 진전의 부족, 이념과 정책 중심의 정계개편 미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국민들이 꼽은 최우선 개혁 과

제였던 정경유착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비단 노무현 대통령의 실책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정치권 전반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치 부패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아졌고, 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 간의 합의(consensus)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중간, 반

대 세력 모두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 정치·행정 분야에 있다고 꼽고 있고, 취임 초기의 기대로부터 유추해 보건데 투명한 정치 자금 관행을 정착시키고 통치 구조와 정당체계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노무현 정부가 정치·행정 분야의 개혁을 제도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지지 세력은 다시 돌아오고 중간 세력과 반대 세력은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Ⅲ-4] 대선 후보 지지자별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못된 정책 분야



3. 국정수행 평가의 주요 변수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지를 철회한 국민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왜 이탈하였는가를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여전히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만약 양자 간에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사회균열을 반영한다는 의미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균열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에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된다면, 비록 지지 세력의 이탈이 극심했지만 여전히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정치적 균열은 남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지지 후보에 따라서 상당히 골이 깊은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균열의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분석은 향후 한국사회의 갈등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음의 <표 Ⅲ-1>은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해 노무현 정부의 국정 수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간에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에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세대와 소득 수준이다. 다시 말해 나이 든 세대일수록,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표 Ⅲ-1> 국정수행 평가 선형회귀분석

종속변수: 1=매우 잘못했다 ~ 5=매우 잘하고 있다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1.901	.147		12.942	.000
*성별	7.300E-02	.036	.080	2.028	.043
**세대	-7.189E-02	.020	-.174	-3.675	.000
교육	-3.163E-02	.030	-.051	-1.062	.289
**소득	-3.048E-02	.012	-.108	-2.610	.009
이념	-6.026E-03	.009	-.029	-.695	.487
영남	3.194E-02	.054	.031	.587	.558
호남	3.430E-02	.023	.079	1.476	.141
노무현	6.230E-02	.062	.068	.997	.319
이회창	-1.088E-02	.065	-.012	-.167	.868
권영길	-1.350E-02	.108	-.006	-.125	.901

R제곱=.055 ** p<0.05 * p<0.1

- 성별: 1=남자, 2=여자
- 세대: 1=20대, 2=30대, 3=40대, 4=50대이상
- 교육: 1=중졸이하, 2=고졸, 3=대재이상
- 소득: 1=100만원 이하 ~6=1000만원 이상
- 이념: 1=진보, 2=중도, 3=보수
- 영남: 0=비영 남, 1=영남
- 호남: 0=비호남, 1=호남
- 노무현: 0=노무현 투표 안함, 1=노무현 투표함
- 이회창: 0=이회창 투표 안함, 1=이회창 투표함
- 권영길: 0=권영길 투표 안함, 1= 권영길 투표함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노무현 정부의 국정 수행을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러났던 세대균열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연령이 높은 유권자들은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젊은 유권자들에 비하여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더욱 부정적인 것이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비판적인 것은 '10·29 부동산 대책'과 같은 노무현 정부의 일부 정책들이 고소득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소득 수준의 차이가 후보 지지의 차이로 유의미하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처럼 소득 수준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노무현의 지지 세력 가운데 젊은 세대는 반대 세력인 연령이 높은 세대보다 여전히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이탈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연령이 높은 세대가 현 정부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을 가르는 주요한 변수인 이념과 지역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구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양자 모두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있어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결국 지지자의 이탈과 반대자의 포섭 실패가 어우러져 노무현 정부의 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4. 미래에 대한 전망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고,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국민들 간의 균열이 약하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정치·행정 분야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제도화하는데 성공한다면 현재의 위기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앞의 [그림 II-18]과 같이 국민들은 1년 후 한국의 상황이 현재와 별 차이 없거나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52%이고,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46%로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많은 편이

다. 하지만 지난 1년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평가에 비하여 낙관적 평가가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낙관적이고 누가 비관적인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림 III-5]는 지난 2002년 16대 대선에서 지지한 후보별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권영길과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보다 별 차이 없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노무현 후보 지지자와 이회창 후보 지지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반대 세력보다 미래에 대하여 보다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세대별로는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보다, 이념별로는 진보가 보수보다, 지역별로는 호남이 영남보다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림 III-5]는 각각 세대와 이념, 지역별로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세대별로는 20~30대 젊은 세대가 다소 낙관적이고, 40대와 50대 이상 세대가 상대적으로 비관적이다. 이념별로는 진보일수록 보다 낙관적으로, 보수일수록 보다 비관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강원, 서울, 호남, 충청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이고, 영남과 인천·경기가 비관적이다. 결국 젊은 세대, 진보, 호남과 같은 노무현의 지지 세력보다 낙관적이고, 나이 든 세대, 보수, 영남과 같은 노무현의 반대 세력일수록 비관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1년 간 한국 상황과 노무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양자는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지지자일수록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반대자일수록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당면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치 (governance) 능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기대가 엇

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 간의 기대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비관적인 전망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실제로 노무현 정부가 정치 개혁의 제도화에 성공하는 일이 관건이라 하겠다.

[그림 Ⅲ-5] 1년 후 한국상황에 대한 전망



주: "1년 후에 한국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빠질 거라고 보십니까?"란 질문에 "매우 나빠질 것이다"와 "대체로 나빠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이들을 묶어 "나빠질 것이다"로, "매우 좋아질 것이다"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이들을 묶어서 "좋아질 것이다"로 표시하였다.

IV. 정책 분야별 전문가 평가

이 장에서는 정책 분야별 세부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 이슈에 대한 평가 점수는 -50에서 +50까지의 범주를 채택하여 ‘매우 잘했음’에 50점을 주고, ‘대체로 잘했음’에 25점, ‘보통’은 0점, ‘대체로 잘못했음’은 -25점, ‘매우 잘못했음’은 -50점을 주어 각각의 빈도수만큼 곱하고, 다시 이를 합한 것을 전체 빈도수로 나누어 각각의 이슈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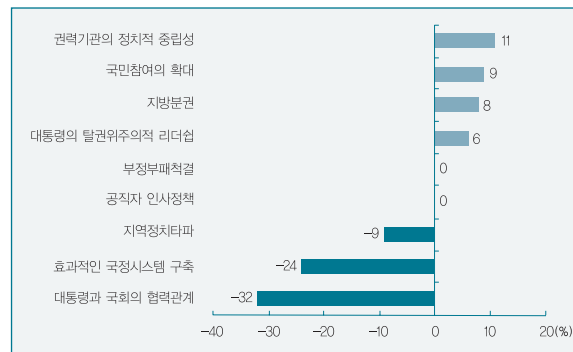
1. 정치·행정 분야

정치·행정 분야의 개별 이슈 중에서 전문가들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국민 참여의 확대’, ‘지방 분권’, 그리고 ‘대통령의 탈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한국의 정치적 풍토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관계’, ‘효과적인 국정시스템 구축’, 그리고 ‘지역정치 타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집중과 권위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민주정부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화와 효율성이라는 덕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책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난 1년 동안의 정국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견해차 보다는 대

선자금을 비롯한 정치적인 문제들로 대통령과 국회의와의 참여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명분에 얽매인 의견대립과 서로의 입장을 설득하고 이해할 조정메커니즘·리더십의 부족으로 이 같은 갈등이 악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림 IV-1] 정치·행정 분야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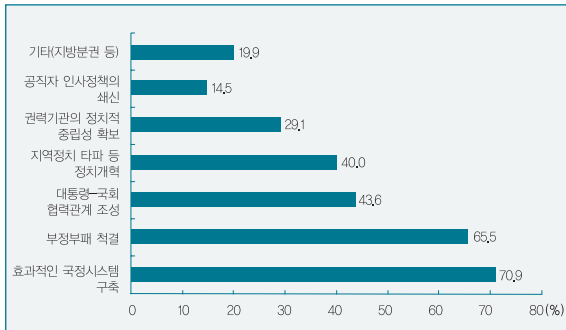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정치·행정 분야에 있어 향후 노무현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 과제로 ‘효과적인 국정시스템 구축’, ‘부정부패척결’,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관계 조성’, ‘지역정치 타파’ 등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권력기관의 중립성 확보’라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지난 1년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이지만, 동시에 29.1%의 응답자가 노무현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한 항목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지난 1년 간 낙제점을 받은 항목들을 시정하는 한편, 지난 1년 간 긍정

적인 평가를 받은 항목들 중에서도 여전히 고질적이라 지적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림 IV-2] 정치분야 향후 4년의 과제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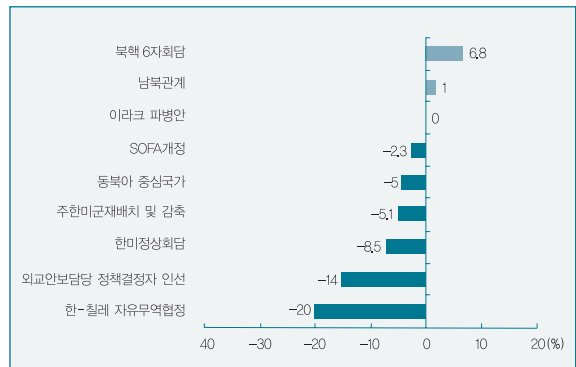


2. 외교·안보 분야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대해서만 약간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칠레 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68.2%가 ‘잘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잘했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미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만 ‘잘했다(38.5%)’는 응답이 ‘잘못했다(31.9%)’는 응답을 다소 넘어섰을 뿐, 한미 정상회담(잘못했다 43.2%, 잘했다 15.9%),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잘못했다 40.9%, 잘했다 22.7%), SOFA 개정(잘못했다 25%, 잘했다 15.9%) 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국정지침으로까지 내세웠던 ‘동북아 중심 국가’에 대해서도 59.1%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책 결정자 인선 문제’에 대해서도 54.6%가 ‘잘못했다’고 평가했으며, ‘잘했다’는 2.3%에 불과해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 외교·안보 분야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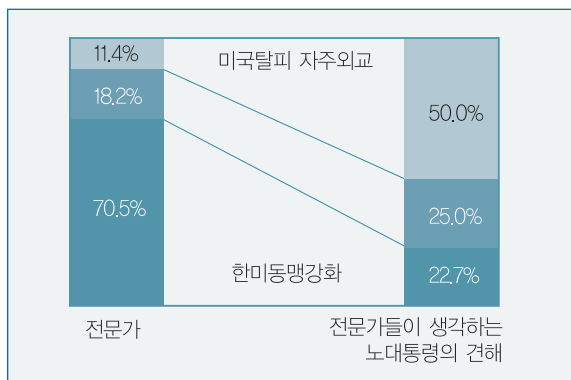


외교·안보 분야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단순히 정책 집행의 실패 혹은 무능이 아니라, 정책 내용 자체가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이념갈등의 핵심 쟁점이 되었던 외교·안보분야의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바람직한 한미관계: 한미동맹 강화인가 자주인가’, ‘주한미군에 대한 견해: 철수인가 지속적 주둔인가’, ‘이라크 파병에 대한 견해: 찬성인가 반대인가’,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견해: 지원중단인가 지원찬성인가’라는 4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하는 점도 동시에 물어 보았다.

[그림 IV-4]는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대통령의 견해 사이의 커다란 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의 70.5%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한미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답변하였고, 11.4%는 미국을 탈피해 자주외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미관계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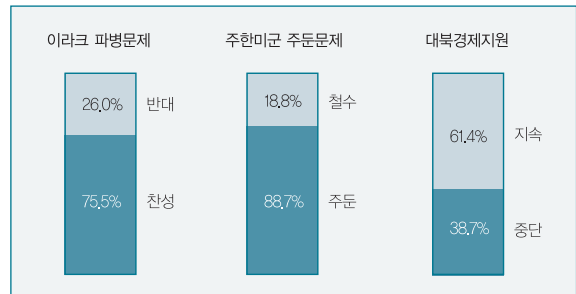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50%의 전문가들이 '미국탈피 자주외교'를 원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가 한미관계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응답은 22.7%에 불과하였다. 이는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방향이라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견해와 노무현 대통령의 견해, 적어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견해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IV-4] 바람직한 한미관계 방향



이 외에도 이라크 파병문제·주한미군문제에서도 전문가들의 견해에는 분명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었다. 75%가 넘는 전문가들이 이라크 파병을 찬성하고 있었고, 88.7%의 전문가들이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파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인 외교·안보분야 전문가들은 25.0%에 지나지 않았으며,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소수(18.8%)의견에 불과했다. 대북경제지원 문제에 관해서도 전문가들 간에는 대체로 합의가 존재하고 있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가 한미관계나 주한미군 문제만큼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61.4%) 전문가들은 대북경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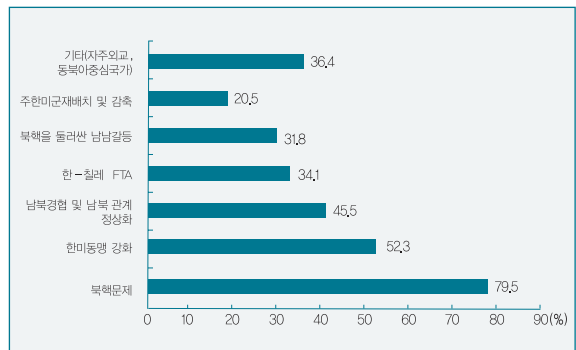
[그림 IV-5] 이라크 파병문제 / 주한미군 주둔문제 / 대북 경제지원 문제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외교·안보분야의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세 개씩 선택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79.5%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핵문제를 지적하였다.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문제가 그 뒤를 이어 각각 52.3%, 45.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교·안보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는 정책적 과제와 그 해결 방향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간의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전문가 집단과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IV-6] 외교·안보 분야 향후 4년의 과제

(복수 응답)



3. 경제 분야

경제 분야의 개별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안정’에만 플러스 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모든 이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마이너스 평가의 폭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 경기 진작, 신용 불량자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중 한 사람도 ‘잘했다’는 응답을 한 사람이 없었다.

경제 분야도 외교·안보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이 우선인가, 분배가 우선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82.9%의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도 ‘매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88.8%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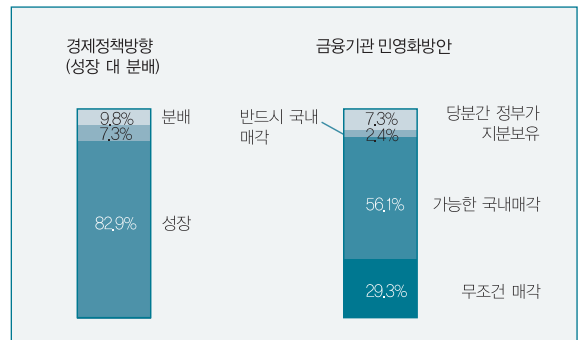
[그림 IV-7] 경제 분야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에서 향후 4년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합의를 보이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었던 ‘실업’, ‘경기 진작’ 등을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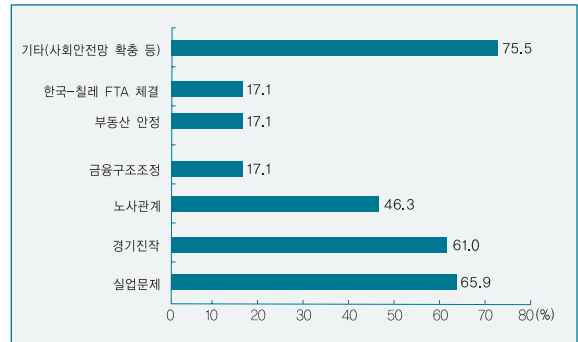
제로 지적하였다.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 이미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합의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노무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림 IV-8]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그림 IV-9] 경제분야 향후 4년의 과제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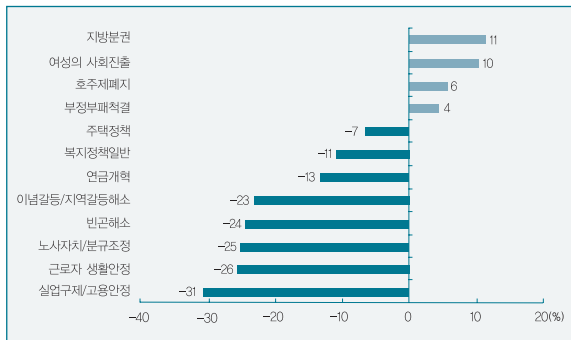
4. 사회 분야

사회 분야 역시 전문가들로부터 비교적 나은 평가를 받은 분야이다. 총 12개의 평가 대상 항목 중 4개의 항목에서는 플러스 점수를 받았으며, 8개의 항목에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

‘지방분권’은 11%, ‘여성의 사회 진출’은 10%, ‘호주제 폐지’는 6%가 높아진 것은 정치 분야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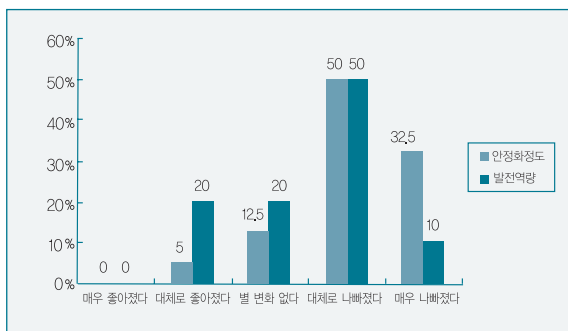
찬가지로 탈집중, 탈권위주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업구제·고용안정, 근로자 생활안정, 노사자치·분규조정, 빈곤해소 등 경제 정책과 연관된 분야에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 4개의 정책에 대한 평균점은 -26.5%이다. 결국, 정치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 분야도 노무현 정부가 ‘해체’는 이루었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조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전혀 발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IV-10] 사회 분야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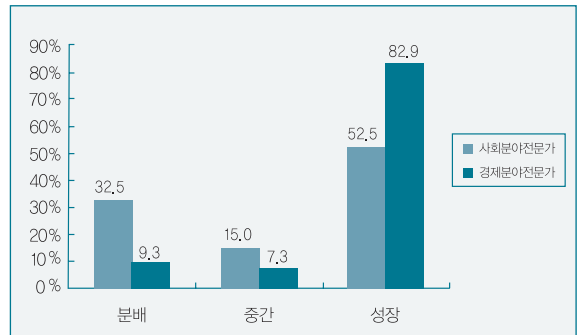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국사회의 안정화 정도와 발전 역량 혹은 사회의 총체적 능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안정해졌(82.5%)와 퇴보했다(60%)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IV-11] 한국사회의 변화: 안정화와 발전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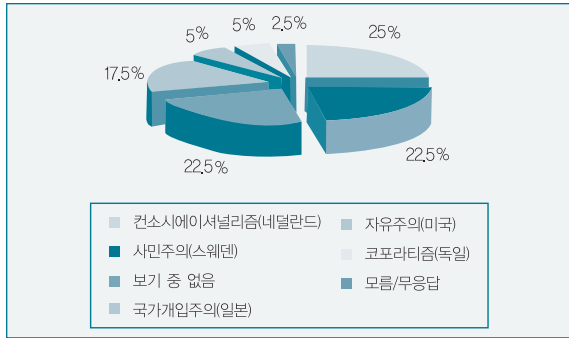
한편, 앞으로 한국 사회가 분배와 성장 중에 어느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32.5%가 분배를, 52.5%가 성장을 선택하였다.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도 분배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제 분야 전문가들의 대다수가 분배(9.8%)보다는 성장(92.9%)을 선택한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V-12] 성장이나 분배냐?



앞으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모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산되어 있었다. [그림 IV-13]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모델도 전문가들로부터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시된 보기 중에 지향해야 할 국가모델이 없다는 응답도 22.5%에 달했다. 앞서 살펴본 외교·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분야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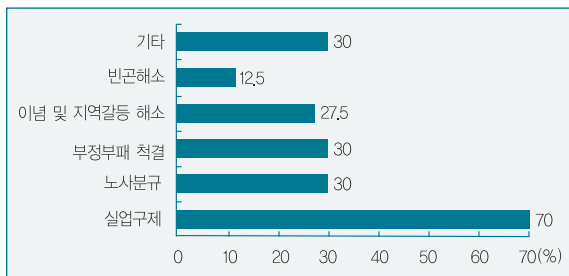
[그림 IV-13] 지향해야 할 국가모델



한편, 사회 분야에서 향후 4년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2가지 선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가 실업구제를 선택하여 결국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노사분규, 부정부패, 이념 및 지역 갈등, 그리고 빈곤 해소와 같은 과거부터 문제가 되어 오던 사회적 현안이 여전히 노무현 정부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림 IV-14] 사회분야 향후 4년의 과제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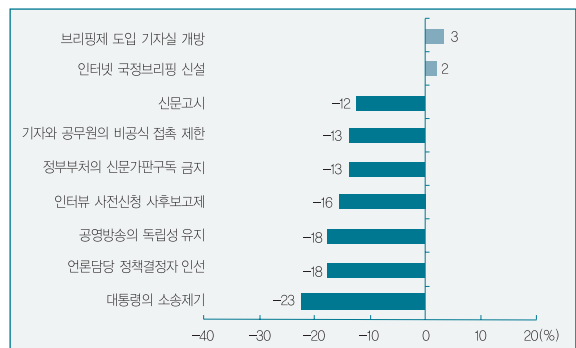
5. 언론 분야

언론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는 ‘브리핑제 도입 및 기자실 개방’과 ‘인터넷 국정 브리핑 신설’이라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언론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영 방

송의 독립성’과 ‘인터뷰 사전 신청, 사후 보고’, 그리고 ‘기자과 공무원의 비공식 접촉 제한’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언론사를 상대로 한 ‘대통령의 소송 제기’와 ‘언론 담당 정책결정자 인선’을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점은 노무현 정부의 언론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과 유력 일간지의 적대관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86.7%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76.6%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적대관계가 유지되거나 지금보다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일부 언론의 적대적 관계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에게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응답자의 80%가 노무현 정부가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언론사를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평가했지만, 동시에 90%의 응답자가 언론사 역시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정파를 편향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송 역시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응답자의 90%가 공영 방송이 노무현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유력 일간지(조·중·동)에 대한 방송사의 비평프로그램(미디어비평-MBC, 미디어포커스-KBS)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60%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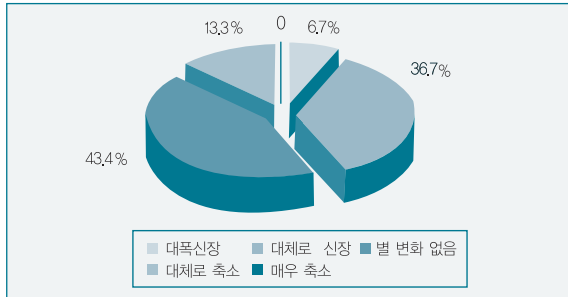
[그림 IV-15] 언론 분야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한편, 정부의 불공정성과는 별개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위축되고 있다(13.3%)보다는 확대되었다(43.3%)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통령의 언론 대상 적대적 발언(20%)이나 정부의 언론사 상대 소송제기(20%)보다는 소유주(경영주)의 압력(46.7%)이나 광고주의 영향(40%) 같은 언론사 내부의 문제를 선택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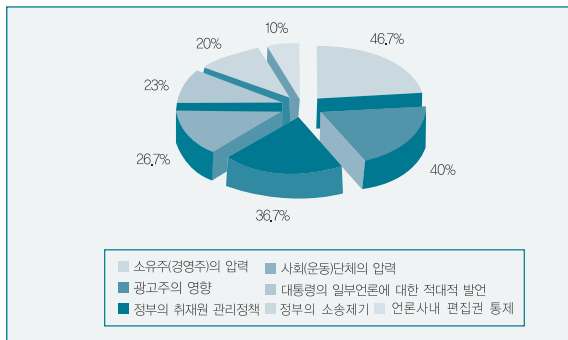
[그림 IV-16] 언론자유 변화

(복수 응답)



[그림 IV-17] 언론자유 위협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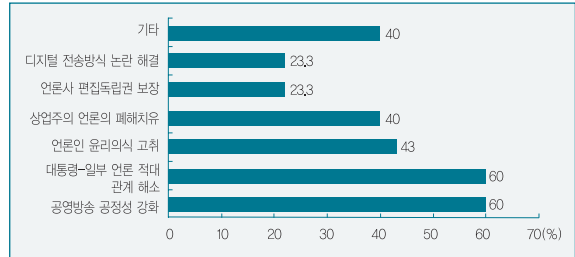
(복수 응답)



언론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언론의 적대적 관계 개선(60%)과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60%)라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언론사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인 윤리의식 고취', '상업주의 언론의 폐해 치유', 그리고 '언론사 편집 독립권 보장'을 지적하였다.

[그림 IV-18] 언론분야 향후 4년의 과제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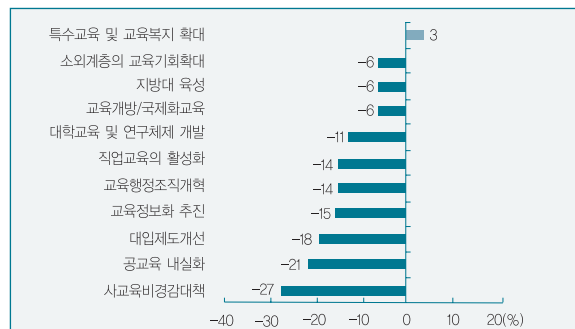


6. 교육 분야

교육 분야는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전문가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된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교육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별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는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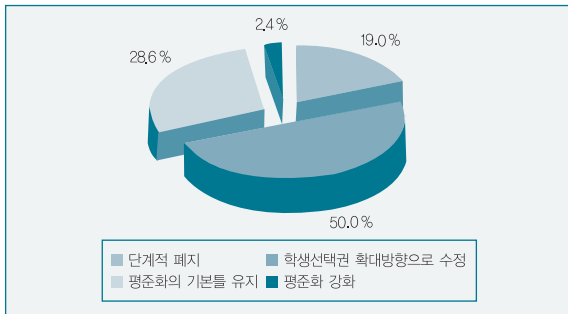
교육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수교육 및 교육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그 외의 10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사교육비 경감 대책', '공교육 내실화', 그리고 '대입제도 개선' 등에 대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림 IV-19] 교육분야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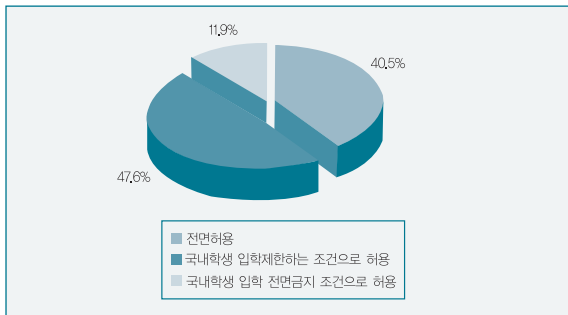


한편,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은 첫째, 교육 기회의 확대, 둘째, 학생간의 경쟁 강화, 셋째, 능력에 따른 차별적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질문에서 현행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8.6%에 불과했다. 반면, 평준화를 폐지(19%)하거나 학생 간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50%에 달했다. 과반수의 전문가들이 현행 평준화 제도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IV-20]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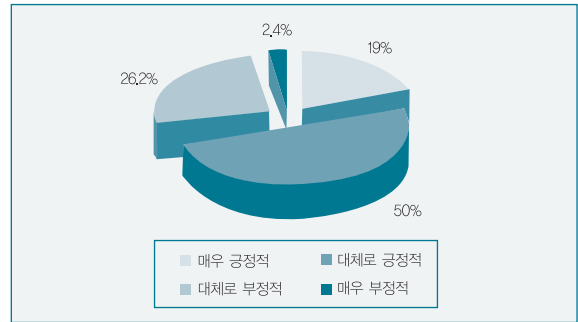
[그림 IV-21] 경제특구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한 입장



경제특구의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도 이러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의 설립에 관한 논란의 핵심은 외국인학교에 국내 학생의 입학여부이다. 이에 대해 조건 없이 전면허용(40.5%)하거나 국내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47.6%)한다는 등 외국인학교에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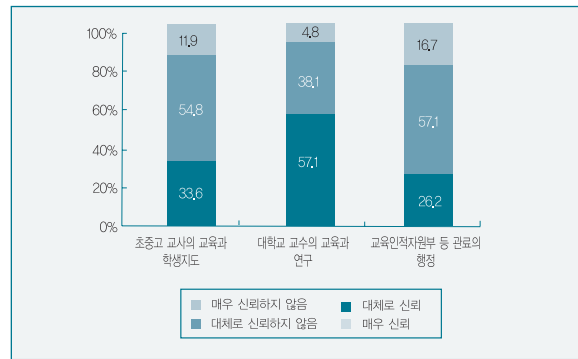
내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2] 지도층 양성 위한 엘리트 교육에 대한 입장



또한 사회지도층 양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 실시에 대해서도 69%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평준화 정책 등을 통해 이제까지 유지되어 왔던 평등지향적인 교육기조가 아니라 능력에 바탕을 둔 차별적이고 경쟁적인 방향으로의 교육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IV-23] 교육분야 주요 담당자에 대한 신뢰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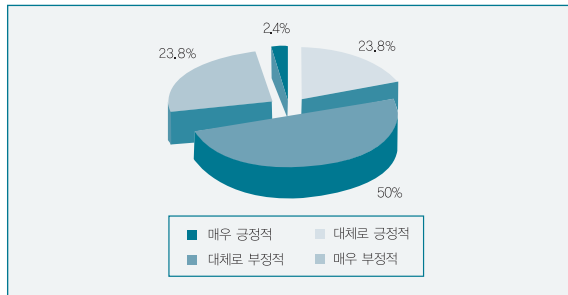


교육 주체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대체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가 '신뢰하고 있다'는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 주체별로 신뢰도를 비교해 보면 대학 교육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초·중·고 교육과 교육 행정 등의 순서를 보인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 관료의 행정에 대

해서는 73.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노무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뒷받침했다.

한편, NEIS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노무현 정부와 충돌하였던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73.8%)이 긍정적이라는 응답(23.8%)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원노조와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정부가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교원노조에 끌려 다녔다(47.6%)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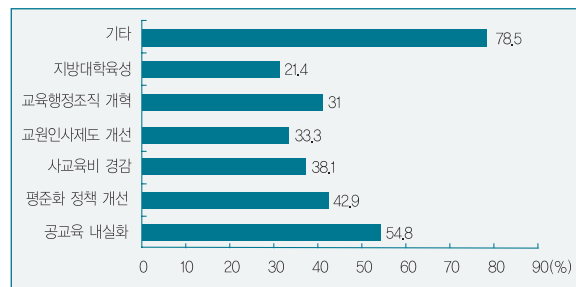
[그림 IV-24] 교원노조에 대한 평가



한편,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공교육 내실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54.8%로 가장 많았으나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항목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되고 있는 교육문제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인 듯하다.

[그림 IV-25] 교육분야 향후 4년의 과제

(복수 응답)



V. 요약 및 분야별 정책제언

노무현 정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일반 국민들과 각계 전문가 모두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당파적 이익과 전체 국민의 일반 이익을 조화시킴으로써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일이다. 지난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지역과 세대, 이념에 따른 국민들 사이의 균열이 극심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부담한 갈등 조정의 과업은 이전 대통령들에 비하여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불행하게도 지난 1년 간 노무현 정부는 이처럼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젊은 세대와 정치 이념적으로 진보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분야를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개혁 열망을, 비록 내용과 정도에 있어서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치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여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고, 지역정당 체제를 이념정당 체제로 재편시키며, 보다 민주적인 통치 구조와 정당 구조를 정착시킬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지지자와 반대자 간에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 핵 위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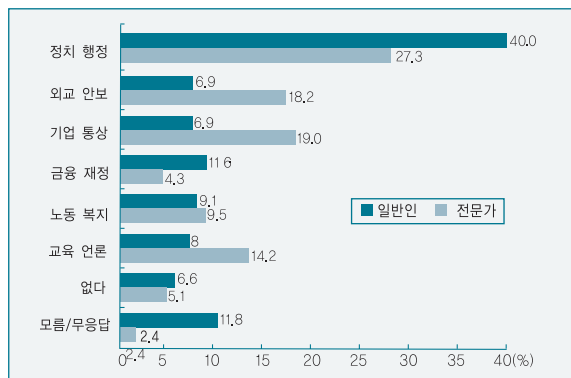
해결하고, 한미 관계를 국익에 부합하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재건설하며,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배려를 강화하는 등의 요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의 개혁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통치(governance)의 부재 상태였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가 국정 수행에 실패함에 따라 세대와 이념, 지역 그리고 이에 더하여 계층에 따른 국민들 간의 분열은 더욱 심화되고,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모두 현 정부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되었다. 특히 지지 기반의 와해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력을 상당히 약화시키면서 국정 수행의 모멘텀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노무현 정부의 위기가 앞으로 더욱 가중된다면 국민들의 개혁 열망은 자칫 정치 불신이나 회의감으로 변질될 수 있고, 이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노무현 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하여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 대체적인 합의(consensus)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림 V-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교 안보와 기업통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일반 국민보다 더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 역시 정치·행정 분야의 실정이 가장 문제

라는 의견이 가장 높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야별로 향후 4년의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노무현 정부가 정치·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이다.

[그림 V-1]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못된 정책 분야



여기서는 노무현 정부가 국정 수행의 모멘텀을 회복하여 현재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정책 분야별로 전문가의 평가를 정리한 후 정책을 제언할 것이다.

정치·행정 분야

정치·행정 분야는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으로 꼽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실정을 만회하는 일이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정치 분야의 전문가들이 뽑은 노무현 정부의 4대 정치적 과제들은 효과적인 국정 시스템 구축, 부정부패 척결, 대통령-국회 협력관계 조성, 지역정치 타파를 포함한 정치 개혁이다.

효과적인 국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 과제의 수를 줄이고 행정부처에 대한 청와대의 일상적인 간섭을 차단하여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부처 위에 군림하였던 청와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대통령의 역할을 집약하고 분권,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의도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대통령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많아서 청와대가 국정의 대부분을 직접 관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청와대에는 동북아경제중심위를 비롯한 6개 위원회, 사회통합기획단의 4개 팀과 신행정수도기획단, 그리고 중소기업특위 등 9개의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존재한다. 또한 행정부처에 대한 청와대의 일상적인 간섭이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오히려 새 시스템이 창구 다원화에 따른 혼선만 부추겼다는 혹평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국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권과 책임행정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맞도록 청와대의 국정과제 수와 행정부처에 대한 간섭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권력 기관 내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지만, 일상적인 정치 과정, 즉 정당 활동과 선거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과 같은 필수적인 정치 관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국회에서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때 정치 개혁의 제도화도 가능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것과 같이 국회를 우회하여 국민을 직접 동원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취임 이후 이른바 '당정분리

라는 원칙 하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탈당한 후, 당내 분쟁이 결국 당의 분리로 이어지는 극심한 혼란과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국을 맞이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정당과 국회를 통하여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포기하고 국민과 직접 대면하려 시도하였다. 이는 정당과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부정하는 일임과 동시에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의 매개체로서 정당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회와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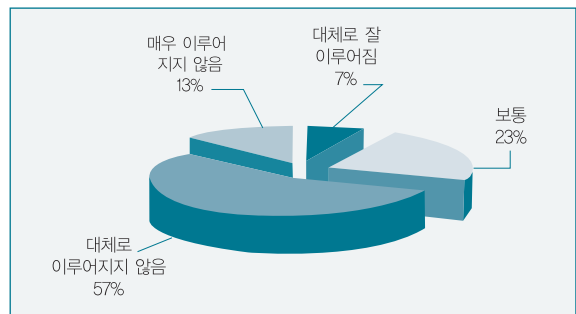
이처럼 국회와 정당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소속 정당, 즉 여당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당적을 두고 있는 여당을 통하여 국회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응답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3김 시대의 특색이었던 보스 정치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러나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달리 소속 정당에 대한 카리스마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서 이른바 ‘당정분리’의 원칙에 따라 소속 정당으로부터 탈당한 일은 스스로 정당정치의 근본을 사실상 부정한 처사였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정치권력의 책임성과 응답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평가를 선거에서 집권 정당에 대한 투표에 반영함으로써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통로가 배제된다는 것이므로, 정당정치를 후퇴시키는 일이었다.

외교·안보 분야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면한 3대 외교안보 과제로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평화적 해결, 한미동맹의 강화, 남북정협 및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 과제들은 결국 남북문제로 귀착되므로, 전문가들의 주문은 남북 간의 문제와 한미 간 문제의 해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외교안보 부처 간 정책 협의와 조정이 원활해져야 한다. 전문가의 70%는 현재 부처간 정책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V-2]. 외교부와 국방부 간, 그리고 외교부와 국방부 내부의 각 부처 간에 주요 외교안보정책에 관하여 협의와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면한 남북문제와 한미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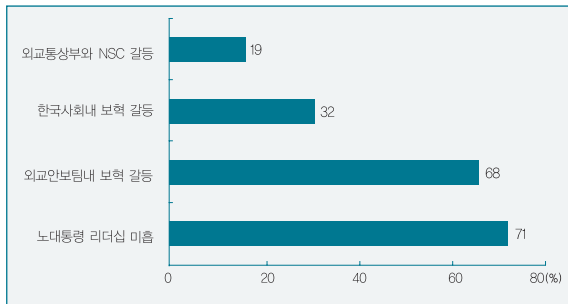
[그림 V-2] 외교·안보 부처 간 정책 협의, 조정 수준



이처럼 부처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과 외교안보팀 내부의 보혁 갈등이 문제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그림 V-3]. 특히, NSC가 본연의 역할을 찾아 외교안보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NSC

에 권한이 집중되면, 책임만 떠맡는 행정부처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고, 부처 간에 협의와 조정이 원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으로 NSC에 집중된 권한은 실제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처에게 옮겨 주고, NSC는 부처 간의 조정자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그림 V-3]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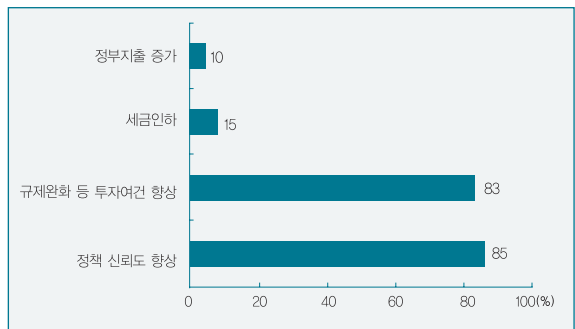
경제 분야

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실업문제와 경기 진작, 노사관계가 노무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업문제와 노사관계는 다음 사회 분야에서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경제 분야의 정책 제언은 경기 진작의 문제로 한정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신뢰도의 향상과 규제 완화 등 기업에 대한 투자 여건의 향상을 제시하였다(그림 V-4). 정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외환 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 구조조정의 미흡,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같은 이전 정부가 남겨놓은 부채를 안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혁적인 정책들을 일관되게 실행에 옮겨야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동북아 허브나 국민소득 2만 달러와 같은 현실감이 부족한 과제들을 주로 부각시키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와 세금을 낮추는 등의 근시안적인 처방만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까지도 효과를 의심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의 진작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덧붙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투자 여건을 향상시키는 일 역시 정부가 장기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림 V-4] 노무현 대통령이 당면한 주요 경기 부양 과제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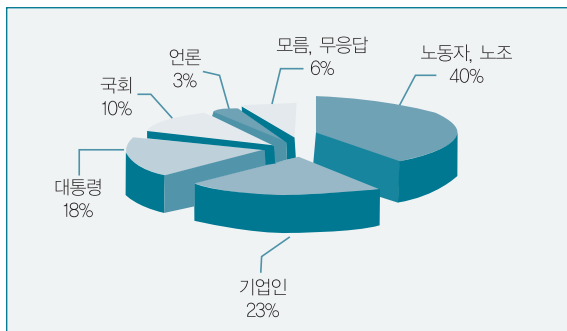


사회 분야

대다수의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과제로 실업 구제를 꼽고 있다. 그리고 노사문제와 부정부패의 척결, 이념 및 지역갈등의 해소 역시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은 앞서 정치 분야에서 논의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실업, 노사분규, 국민들 간의 갈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2003년 11월 기준으로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실업 상태이고, 현재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4배에 이르고 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을 제시하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청년실업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신규보다 경력자를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1995년 대학 설립 규제 완화 이후 수요에 비해 대졸자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도 젊은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체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실업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구조 변화에 어울리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학력 노동자의 장기적 수급구조를 재조정하는 등 중장기적이고 원칙적인 정책들이 요구된다.

[그림 V-5] 노사문제의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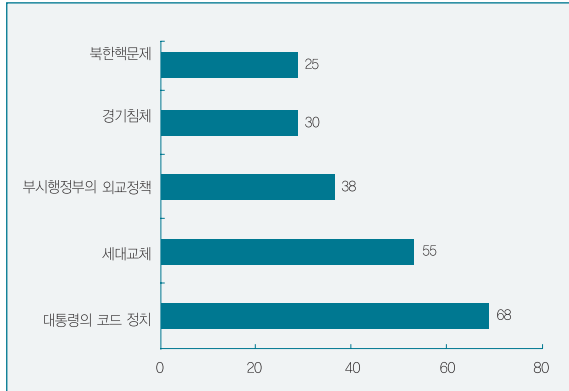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와 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심판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임의 룰을 제시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사회분야 전문가들이 노사문제의 책임에 대하여 기업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그림 V-5]는 노사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을 때 대통령과 정부는 엄격한 심판의 위치를 잃지 않아야 한다. 어느 일방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일방은 더욱 크게 저항할 수밖에 없으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다. 이는 양쪽의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노무현 정부는 가장 나쁜 모습을 보여 왔다.

끝으로 국민들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갈등을 약화시키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통합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억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은 정당 간의 경쟁으로 제도화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현재의 지역정당체제를 이념정당체제로 전환시키는 일 역시 지역갈등을 이념갈등으로 대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 간에 이념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것을 정당 간의 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은 자신의 이념과 정책 노선을 보다 분명하게 부각하여서 이에 동의하는 유권자들을 동원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념 대립의 원인으로 대통령의 코드 정치를 가장 많이 꼽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통령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요구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술로는 자신의 당파성을 부각하면서 실제 정책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지자는 실제 정책에 실망하고 반대자는 그러한 언술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자는 모두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갈등은 심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은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돌아가고, 국민들 간의 이념갈등은 정당 간의 경쟁으로 제도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림 V-6] 이념대립 원인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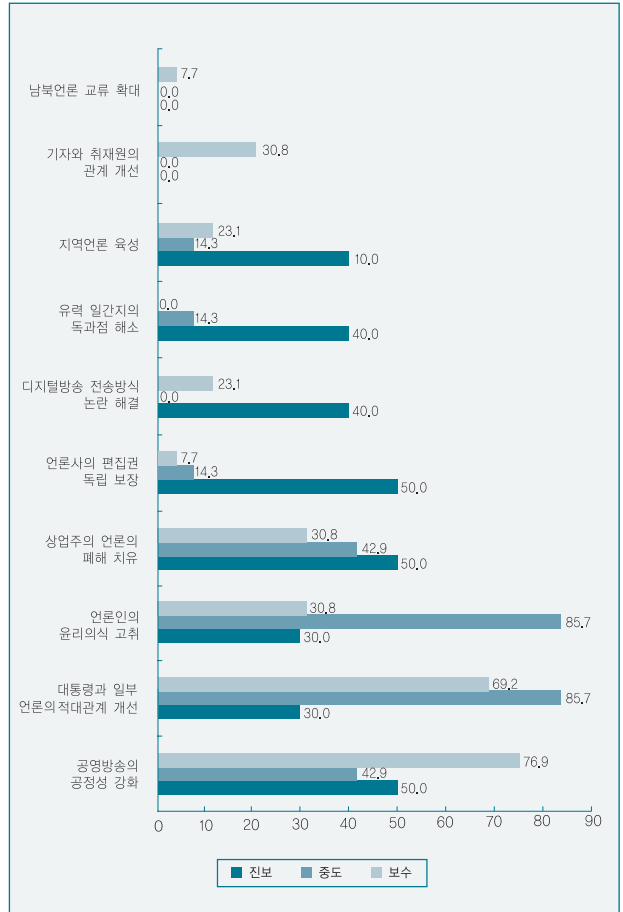


언론 분야

언론 분야의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와 대통령과 일부 언론 간의 적대 관계 해소를 꼽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이념에 따른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언론의 특수성 상 전문가들 가운데 진보와 중도, 보수의 의견을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그림 V-7]은 각각 언론 분야 전문가들 중 진보와 중도,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노무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진보적인 전문가일수록 상업주의 언론의 폐해 치유,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 보장과 같은 언론 개혁의 과제들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수적일수록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나 대통령과 일부 언론 간 적대 관계의 개선 등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바로잡는 일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간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언론 개혁을 유도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삼가야 할 것이다.

[그림 V-7]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언론 분야의 과제

(복수 응답)



교육 분야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5대 교육 과제로 공교육의 내실화, 평준화 정책 개선,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육행정조직 개혁을 들고 있다. 이들 가운데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문제, 인사제도와 행정조직 개혁은 서로 연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교육 분야의 과제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의 경감, 평준화 정책의 개선, 교원 인사제도와 행정조직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을 더욱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 학교의 운영과 교과 편성, 수업 내용에 있어서 규제의 범위는 좁히는 대신 엄격하게 함으로써 각급 학교와 교사들이 더욱 많은 재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벌어지게 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끊임없는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별로 자율적인 개선의 노력이 증진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 입시의 문제로 귀결되는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문제는 학벌 위주의 사회 구조가 근본 원인

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력보다 능력이, 연줄보다 개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

평준화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학의 설립을 촉진하여 학교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간의 학력의 격차를 인정하여 학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일수록 학생들이 내신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모순을 해결하여야 한다.

끝으로 교원 인사제도와 행정조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청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 대하여 강한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선거비리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교육감 선출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 설문 문항〉

전문가 · 일반인 공통문항

문1) 000님께서서는 다음 중 노무현정부가 제일 잘한 분야는 무엇이고 제일 잘못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제일 잘 한 분야() 제일 잘못된 분야()

- 1) 정치·행정 2) 외교·안보
- 3) 기업·통상 정책 4) 금융·재정
- 5) 노동·복지 6) 교육·언론
- 7) 없다

문2) 000님께서서는 노무현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국정수행을 얼마나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까?

- 1) 매우 잘못할 것 2) 대체로 잘못할 것
- 3) 보통 4) 대체로 잘할 것 5) 매우 잘할 것

문3) 000님께서서는 노무현정부가 현재 국정수행을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못했다 2) 대체로 잘못했다
- 3) 보통이다 4) 대체로 잘하고 있다
- 5) 매우 잘하고 있다

문4) 000님께서서는 1년전에 비해 한국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빠졌다고 보십니까?

- 1) 매우 나빠졌다 2) 대체로 나빠졌다
- 3) 별 차이없다 4) 대체로 좋아졌다
- 5) 매우 좋아졌다

문5) 000님께서서는 1년후에 한국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질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빠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 1) 매우 나빠질 것이다
- 2) 대체로 나빠질 것이다
- 3) 별 차이 없을 것이다
- 4)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 5) 매우 좋아질 것이다

문6)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는다면 000님께서서는 재신임하시겠습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문7) 000님께서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중 사임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문7)-1 (‘그렇다’ 라고 응답하신 분에 한해) 언제 사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6개월내 2) 1년내 3) 2년내 4) 3년내

문8) 000님께서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문9) 000님께서서는 지난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찍으셨습니까?

- 1) 이회창 2) 노무현
- 3) 권영길 4) 기타 혹은 기권했음

문10) 000님께서 2004년 4월 총선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실 생각이십니까?

-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열린우리당
- 4) 민주노동당 5) 자민련 6) 무소속
- 7) 아직 결정하지 못함
- 8) 투표할 생각이 없음

문11) ~ 문16) 000님께서 다음 각 분야에서 노무현 정부가 업무수행을 얼마나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매우 잘못했다 2) 대체로 잘못했다
- 3) 보통이다 4) 대체로 잘했다
- 5) 매우 잘했다

문11) 정치·행정

문12) 외교·안보

문13) 기업·통상

문14) 금융·재정

문15) 노동·복지

문16) 교육·언론

문17) 000님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다음 중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진보'라고 생각하시면 0점, '중도'라고 생각하시면 5점, '가장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10점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0점과 10점의 차이는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며, 이 사이의 어떤 점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0	1	2	3	4	<u>5</u>	6	7	8	9	10
가장					중도					가장
진보										보수

SQ1) 실례지만, 선생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만18세 미만은 조사중단

SQ2) 성 별 : 1. 남자 2. 여자

SQ3)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농/임/어업
- 2. 자영업
- 3. 블루칼라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 4. 화이트칼라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 5. 가정주부
- 6. 학생
- 7. 무직/기타

SQ4)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 1. 중졸 이하
- 2. 고 졸
- 3. 대재 이상

SQ5) 선생님의 현재 월평균소득은 어떠하십니까?

- 1. 50만원 미만
- 2. 50만원 초과 ~ 100만원 미만
- 3. 100만원 초과 ~ 150만원 미만
- 4. 150만원 초과 ~ 200만원 미만
- 5. 200만원 초과 ~ 300만원 미만
- 6. 300만원 초과

SQ6) 선생님의 현 거주지는 어느 시/도입니까?

- 1. 서울
- 2. 인천/경기
- 3. 강원
- 4. 대전/충청
- 5. 광주/전라
- 6. 대구/경북
- 7. 부산/경남
- 8. 제주
- 9. 기타

전문가 대상 문항

〈정치·행정 분야〉

문1) 000님께서는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1) 매우 실패했다
- 2) 대체로 실패했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성공했다
- 5) 매우 성공했다

- (1) 검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확립
- (2) 대통령-국회간의 협력관계 조성
- (3) 지역정치 타파를 포함한 정치개혁
- (4) 공직자 인사정책의 쇄신
- (5) 지방 분권 실현
- (6)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 (7)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깨끗한 정치의 실현
- (8) 효과적인 국정 시스템 구축
- (9) 대통령의 탈권위주의적 리더십 발휘

문2) 000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세 개만 적어주십시오.

- (1) 검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확립
- (2) 대통령-국회간의 협력관계 조성
- (3) 지역정치 타파를 포함한 정치개혁
- (4) 공직자 인사정책의 쇄신
- (5) 지방 분권 실현

- (6)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 (7)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깨끗한 정치의 실현
- (8) 효과적인 국정 시스템 구축
- (9) 대통령의 탈권위주의적 리더십 발휘
- (10) 재신임 국민투표
- (11) 공명선거 실현

문3) 000님께서는 향후 4년간 한국 정치가 지난 1년과 비교하여 얼마나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퇴보할것
- 2) 대체로 퇴보할것
- 3) 보통
- 4) 대체로 발전할 것
- 5) 매우 발전할 것

문4) 000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이 다음 중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 라고 생각하시면 0점 ‘중도’라고 생각하시면 5점, ‘매우 보수’ 라고 생각하시면 10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0	1	2	3	4	<u>5</u>	6	7	8	9	10
매우					중도					매우
진보										보수

문5) 000님께서는 노무현정부가 출범했던 1년 전에 비하여 현재의 한국 정치가 총체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퇴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발전했다
- 2) 대체로 발전했다
- 3) 거의 같다
- 4) 대체로 퇴보했다
- 5) 매우 퇴보했다

문6)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과 국회가 여러 차례 대립하였습니다. 000님께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만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1) 대통령 2) 여당 3) 야당 4) 언론 5) 시민단체

문7) 000님께서 현행 대통령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2)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바꾸어야 한다
 3)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
 4) 내각제로 바꾸어야 한다

문8) 000님께서 노무현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지역갈등이 심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심해졌다 2) 대체로 심해졌다
 3) 변화가 없다 4) 대체로 완화되었다
 5) 매우 완화되었다

문9) 000님께서 노무현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이념갈등이 심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심해졌다 2) 대체로 심해졌다
 3) 변화가 없다 4) 대체로 완화되었다
 5) 매우 완화되었다

문10) 000님께서 노무현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세대갈등이 심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심해졌다 2) 대체로 심해졌다
 3) 변화가 없다 4) 대체로 완화되었다
 5) 매우 완화되었다

문11) 000님께서 4월 총선에서 정치권의 물갈이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대폭 이루어져야 한다

2)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3) 물갈이가 필요없다

문12) 000님께서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공정하다 2) 대체로 공정하다
 3) 대체로 불공정하다 4) 매우 불공정하다

문13) 000님께서 젊은 유권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정치발전에 대체로 기여하고 있다
 3)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4) 정치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

문14) 000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이 포퓰리즘적 성향이 강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4)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문15) 000님께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1) 필요하며 가급적 빨리 시작해야 한다
 2) 필요하지만 시간을 갖고 천천히 실시해야 한다
 3) 문제가 많으므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
 4) 불필요하며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문16) 000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에 의해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2) 대체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3) 그저 그럴 것이다
 4) 대체로 효과적일 것이다
 5)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

문1) 000님께서는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시오.

- 1) 매우 실패했다 2) 대체로 실패했다
- 3) 보통이다 4) 대체로 성공했다
- 5) 매우 성공했다

- (1) SOFA(한미행정협정) 개정
- (2)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 (3) 북한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3자·6자 회담 개최
- (4) 한미정상회담
- (5) 이라크전 파병
- (6)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 (7)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 정상화
- (8)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로의 부상
- (9)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권 이양
- (10) 외교안보 담당 정책결정자 인선

문2) 000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외교·안보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세 개만 적어주십시오.

- (1) 한미동맹관계의 강화
- (2) 6자 회담을 통한 북한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
- (3) 자주외교의 구현
- (4) 북한핵 위기를 둘러싼 남남갈등의 해소
- (5)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 정상화
- (6)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 (7) 이라크전 파병 및 전후복구
- (8)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 (9)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로의 부상

문3) 000님께서는 향후 4년간 노무현정부가 지난 1년과 비교하여 외교안보 정책을 얼마나 더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못할 것 2) 대체로 잘못할 것
- 3) 보통 4) 대체로 잘할 것
- 5) 매우 잘할 것

문4) 000님께서는 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10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5점,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0점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0점과 10점 사이의 어떤 점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아주 나쁘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아주 좋다

문5) 000님께서는 바람직한 한미관계와 관련해 “한미 동맹 강화”를 지지하시면 10점, “미국탈피 자주외교”를 지지하시면 0점, “중도다”라고 생각하시면 5점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0점과 10점 사이의 어떤 점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미국탈피 자주외교					중도다					한미동맹 강화

문6) 000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관계에 대한 노선이 다음 중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동맹 강화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10점, “미국탈피 자주외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0점, “중도다”라고 생각하시면 5점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0점과 10점 사이의 어떤 점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미국탈피 자주외교					중도다					한미동맹 강화

문7) 000님께서는 주한미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주한미군은 계속적으로 주둔해야 한다
- 2) 주한미군은 앞으로 상당기간은 주둔해야 한다
- 3)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
- 4) 즉각 철수해야 한다

문8) 000님께서서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적극 지지한다
- 2) 대체로 지지하는 편이다
- 3)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 4) 적극반대 한다

문9) 000님께서서는 노무현정부가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 방향의 정책을 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햇볕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
- 2)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 3) 북한의 태도에 따라 햇볕정책과 강경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 4)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강경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문10) 노무현정부는 미국주도 이라크 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000님께서서는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 2) 대체로 찬성한다
- 3) 대체로 반대한다
- 4) 적극 반대한다

문11) 000님께서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북한핵 위기와 한미동맹관계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당국자는 다음 중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담당자 한 명을 선택하십시오.

- 1)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 2)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 3) 김희상 국방보좌관
- 4) 반기문 외교보좌관

- 5)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 6) 고영구 국정원장
- 7) 모르겠다

문12) 북한핵 위기 및 한미동맹관계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간 정책협의를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 2)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5)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문 12에서 “4” 아니면 “5”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문12)에 대해 답하십시오.

문13) 북한핵 위기 및 한미동맹관계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간 정책협의를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 두 개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1)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
- 2) 외교통상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갈등
- 3) 노무현 외교·안보 정책팀 내의 “보혁갈등”
- 4) 미국의 압력
- 5) 한국사회 내의 보수·진보간 남남갈등

문14) 000님께서서는 북한핵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무현정부가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현금지원을 포함한 모든 대북 경제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2) 경제지원을 중단하되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는 계속한다
- 3) 정부차원의 경제교류와 지원을 지속한다
- 4) 경제교류의 지원에 찬성하며 미국과 북한이 각각 양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문15) 000님께서 취임 후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북한을 방문해서라도 만나야 한다
 - 2) 김정일 위원장의 한국답방을 통해 만나야 한다
 - 3) 핵 시설 포기 이전에는 만나면 안 된다
 - 4) 어떤 경우든 절대 만나면 안 된다

〈경제 분야〉

문1) 000님께서 1년이 지난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다음의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 | |
|------------|-------------|
| 1) 매우 실패했다 | 2) 대체로 실패했다 |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성공했다 |
| 5) 매우 성공했다 | |

- (1) 재벌개혁(대기업정책)
- (2) 경기진작
- (3) 물가안정
- (4) 실업문제
- (5) 노사관계
- (6) 사회안전망 확충-복지대책
(공적연금체계 개선)
- (7) 공공부문 개혁(민영화)
- (8) 금융구조조정(신용카드사 문제, 은행민영화)
- (9) 신용불량자
- (10) 지방균형발전(신행정수도)
- (11) 동북아 경제 중심
- (12) 부동산 안정
- (13) 세계 개혁(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 (14) 농업부문 구조조정
- (15) 남북한 경제교류 증대
- (16) 한국·칠레 FTA 협정
- (17) 정부재정의 건전성

문2) 000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경제적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세 개**만 적어주십시오.

- (1) 재벌개혁(대기업정책)
- (2) 경기진작
- (3) 물가안정
- (4) 실업문제
- (5) 노사관계
- (6) 사회안전망 확충-복지대책
(공적연금체계 개선)
- (7) 공공부문 개혁(민영화)
- (8) 금융구조조정(신용카드사 문제, 은행민영화)
- (9) 신용불량자
- (10) 지방균형발전(신행정수도)
- (11) 동북아 경제 중심
- (12) 부동산 안정
- (13) 세계 개혁(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 (14) 농업부문 구조조정
- (15) 남북한 경제교류 증대
- (16) 한국·칠레 FTA 협정
- (17) 정부재정의 건전성

문3) 000님께서 향후 4년간 노무현정부가 지난 1년과 비교하여 경제정책을 얼마나 더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잘못할 것 | 2) 대체로 잘못할 것 |
| 3) 보통 | 4) 대체로 잘할 것 |
| 5) 대체로 잘할 것 | |

문4) 000님께서 한국의 경제정책이 성장과 분배 중에서 어느 부분에 앞으로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배라고 생각하시면 0점,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10점, 분배와 성장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5점을 주십시오. 물론 0점과 10점 사이의 어떤 점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분배					분배와 성장의					성장
					중간					

문5) 000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 중 향후 4년간 경제정책 운용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우선 순위별로 **세 개**만 골라 주십시오.

- (1) 재벌개혁 (대기업정책)
- (2) 경기진작
- (3) 물가안정
- (4) 실업문제
- (5) 노사관계
- (6) 사회안전망 확충-복지대책(공적연금체계 개선)
- (7) 공공부문 개혁(민영화)
- (8) 금융구조조정(신용카드사 문제, 은행민영화)
- (9) 신용불량자
- (10) 지방균형발전(신행정수도)
- (11) 동북아 경제 중심
- (12) 부동산 안정
- (13) 세계 개혁(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 (14) 농업부문 구조조정
- (15) 남북한 경제교류 증대
- (16) 한·일 FTA 체결
- (17) 정부재정의 건전성

문6) 000님께서 다음 중 무엇이 앞으로 우리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세 개**만 골라 주십시오.

- 1) 노사갈등
- 2) 중국과의 경쟁
- 3)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따른 재정부담과 세대간 갈등
- 4) 인구 고령화
- 5) 제조업공동화
- 6) 교육부실화, 이공계 기피
- 7)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확대

- 8) 빈부격차 확대
- 9) 북한문제, 통일비용
- 10) 부동산문제
- 11) 국제자본시장통합에 따르는 금융불안

문7)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 국내자본이든 해외자본이든 가리지 않고 조기 매각해야 한다.
- 2) 가능한 한 국내자본에 매각해야 한다.
- 3) 반드시 국내자본에만 매각해야 한다
- 4) 당분간 정부가 지분을 팔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8) 다음 경제 정책 담당기구들이 어느 정도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실패했다
- 2) 대체로 실패했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성공했다
- 5) 매우 성공했다

- (1) 재경부
- (2) 기획예산처
- (3) 청와대 정책실
- (4) 금융감독위원회
- (5) 한국은행
- (6) 공정위원회

문9) 000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부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무현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순서대로 **두 개**만 적어주십시오.

- 1)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선
- 2) 세계개혁
- 3) 정부지출 억제
- 4) 예산회계제도 개선
- 5) 중기재정계획

문10) 000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향후 세계개혁을 추진할 경우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순서대로

두 개만 적어주십시오.

- 1) 자본소득 종합과세 강화
- 2) 부가가치세 개선
- 3) 자영업자 과세 강화
- 4) 소득과세기반 확충
- 5) 재산과세 강화

문11) 000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향후 예산제도를 개혁할 경우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순서대로

두 개만 적어주십시오.

- 1) 성과주의 예산
- 2) 발생주의 회계
- 3) 중기재정관리체계 도입
- 4)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 5) 재정용자제도 개편

문12) 000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부의 예산항목 중에서 가장 삭감이 필요한 분야를 순서대로 **두 개**만 적어주십시오.

- 1) 사회복지
- 2) 교육 및 노동
- 3) 과학기술 및 정보화
- 4) SOC
- 5) 국방·통일·외교
- 6) 중소·벤처기업 및 수출 지원
- 7) 문화분야
- 8) 인건비

문13) 000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경기부양이 필요한 경우 가장 적절할 것 같은 정책을 순서대로 **두 개**만 적어주십시오.

- 1) 금리인하
- 2) 세금인하
- 3) 정부지출 증가
- 4) 규제완화 등 투자여건 향상
- 5) 정책의 신뢰도 향상

문14) 000님께서 향후 제2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자금투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국회동의를 거쳐 공적자금 조성
- 2) 기존의 재정자금 사용
- 3) 민간부문에서 해결
- 4) 외국자본을 통해 해결

문15) 000님께서 노무현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사용한 조세수단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2)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
- 3)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 4) 효과는 없으며 부작용만 클 것이다.

문16) 000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향후 부동산 과세 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두 개**만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 1) 보유과세 강화
- 2) 보유과세 완화
- 3) 양도소득세 강화
- 4) 양도소득세 완화
- 5) 취득세·등록세 강화
- 6) 취득세·등록세 완화

문17) 000님께서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과 관련하여 노무현정부의 지난 1년간 업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 아주 잘못했다
- 2) 대체로 잘못했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잘했다
- 5) 아주 잘했다

문18) 000님께서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4년간 얼마만한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1) 성과가 아주 나쁠 것이다
- 2) 별 진전이 없을 것이다

- 3) 보통일 것이다
- 4) 대체로 성과를 거둘 것이다
- 5) 대단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문19) 000님께서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적극 반대한다 2) 대체로 반대한다
- 3) 별로 상관없다 4) 대체로 찬성한다
- 5) 적극 찬성한다

문20) 000님께서 한·일 FTA 체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1) 적극 반대한다
- 2) 대체로 반대한다
- 3) 별로 상관없다
- 4) 대체로 찬성한다
- 5) 적극 찬성한다

〈사회 분야〉

문1) 000님께서 1년이 지난 현재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다음의 사회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1) 매우 실패했다 2) 대체로 실패했다
- 3) 보통이다 4) 대체로 성공했다
- 5) 매우 성공했다

- (1) 복지정책 일반
- (2) 지방분권
- (3) 노사자치/분규조정
- (4) 실업구제/고용안정
- (5) 이념 갈등 및 지역 갈등 해소
- (6) 근로자의 생활안정
- (7) 빈곤해소
- (8) 호주제 폐지정책
- (9) 연금개혁
- (10) 여성의 사회적 진출

- (11) 부정부패 척결
- (12) 주택정책

문2) 000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노무현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과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두 개**만 적어주십시오.

- (1) 복지제도 개선
(노인·장애인문제, 연금·건강보험 개선)
- (2) 노사자치/분규조정
- (3) 실업구제/고용안정
- (4) 이념갈등 및 지역갈등 해소
- (5) 근로자의 생활안정
- (6) 빈곤해소
- (7) 호주제폐지정책
- (8) 연금개혁
- (9)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
- (10) 부정부패 척결
- (11) 주택안정
- (12) 시민 안전(건물붕괴, 치안, 교통사고 등)

문3) 000님께서 향후 4년간 노무현정부가 지난 1년과 비교하여 사회 정책을 얼마나 더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못할 것 2) 대체로 잘못함
- 3) 보통 4) 대체로 잘할 것
- 5) 매우 잘할 것

문4) 000님께서 1년 전 노무현정부가 출범할 당시 노무현정부의 정책 성향은 위 연속선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배라고 생각하시면 0점,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10점, 분배와 성장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5점을 주십시오. 물론 0점과 10점 사이의 어떤 점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분배 분배와 성장의 중간 성장

문5) 000님께서 1년이 지난 현재 노무현정부의 정책 성향은 위 연속선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배라고 생각하시면 0점,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10점, 분배와 성장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5점을 주십시오. 물론 0점과 10점 사이의 어떤 점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분배 분배와 성장의 중간 성장

문6) 000님께서 한국사회가 성장과 분배 중에서 어느 부분에 앞으로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배라고 생각하시면 0점,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10점, 분배와 성장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5점을 주십시오. 물론 0점과 10점 사이의 어떤 점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분배 분배와 성장의 중간 성장

문7) 000님께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우리의 경제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높은 편이다 2) 적정하다
 3) 다소 낮은 편이다 4) 매우 낮은 편이다

문8) 000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에 예시된 복지 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할 분야를 순서대로 **두 개**만 적어주십시오.
 1) 누진세율의 강화
 2) 세부담 형평성 제고
 3) 사회안전망 확충

- 4) 복지정책의 민영화
- 5) 교육 등 인적자원의 개발

문9) 000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사회는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 매우 안정되었다 2) 대체로 안정되었다
 3) 별 변화가 없다 4) 대체로 불안정해 졌다
 5) 매우 불안정해 졌다

문10) 000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이후 1년 전에 비하여 현재의 **한국사회의 발전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퇴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전역량이란 한 사회의 총체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1) 매우 퇴보했다 2) 대체로 퇴보했다
 3) 거의 같다 4) 대체로 향상됐다
 5) 매우 향상됐다

문11) 지난 1년 동안 노사분규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000님께서 그 책임이 **우선**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만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 대통령 2) 국회 3) 기업인
 4) 노동자/노동조합 5) 언론

문12) 000님께서 다음에 열거하는 요인들이 이념대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세 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지역갈등
 2) 세대교체
 3) 미국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4) 북한 핵문제
 5) 이라크전쟁
 6) 대통령의 코드 정치
 7) 경제침체
 8) 시민운동

9) 노사갈등

문13)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국가의 모델'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00님의 생각과 가장 근접한 모델의 번호를 기입해주시시오.

- 1) 미국의 자유주의
- 2) 일본의 국가개입주의
- 3) 독일의 코프라티즘(조합주의)
- 4) 네덜란드의 컨소시에이셔널리즘(협의주의)
- 5) 스웨덴의 시민주의
- 6) 위에 없음

〈언론 분야〉

문1) 000님께서서는 1년이 지난 현재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다음의 언론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1) 매우 실패했다 2) 대체로 실패했다
- 3) 보통이다 4) 대체로 성공했다
- 5) 매우 성공했다

- (1) 브리핑룸제도 도입 및 기자실 개방
- (2) 기자와 공무원의 비공식 접촉제한
- (3) 인터뷰 사전신청제도 및 사후보고 제도
- (4) 신문고시
- (5) 정부부처의 신문 가판구독 금지
- (6) 인터넷 국정브리핑 신설
- (7) 대통령의 유력일간지 대상 소송제기
- (8) 언론담당 정책결정자에 대한 인선
- (9) 공영방송의 독립성 유지

문2) 000님께서서는 향후 남은 4년 동안 노무현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언론분야 정책을 세 개만 고르신다면?

- 1) 유력일간지(조중동)의 독과점 해소
- 2)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
- 3) 언론사의 편집권(편성권) 독립보장

- 4) 지역언론 육성
- 5) 인터넷 언론육성
- 6) 대통령과 일부 언론간의 적대적 관계개선
- 7) 남북언론교류 확대
- 8) 상업주의 언론의 폐해 치유
- 9) 언론인의 윤리의식 고취
- 10)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논란 해결
- 11)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 12)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 개선

문3) 000님께서서는 향후 4년간 노무현정부가 지난 1년과 비교하여 언론정책을 얼마나 더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못할 것 2) 대체로 잘못할 것
- 3) 보통 4) 대체로 잘할 것
- 5) 매우 잘할 것

문4) 000님께서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유력일간지(조중동)간의 적대적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 2) 대체로 바람직하지 않다
- 3) 그저 그렇다
- 4) 대체로 바람직하다
- 5) 매우 바람직하다

문5) 000님께서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공영방송사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우호적이다
- 2) 대체로 우호적이다
- 3) 중립적이다
- 4) 대체로 우호적이지 않다
- 5) 매우 우호적이지 않다

문6) 000님께서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유력일간지(조중동)간의 적대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심화될 것이다

- 2) 대체로 심화될 것이다
- 3)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 4) 대체로 완화될 것이다
- 5) 매우 완화될 것이다

문7) 000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대폭 신장되었다
- 2) 대체로 신장된 편이다
- 3) 이전과 마찬가지로
- 4) 대체로 축소된 편이다
- 5) 대폭 축소되었다

문8) 000님께서는 현재 언론의 자유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두개**만 골라 주십시오.

- 1) 대통령의 일부 언론에 대한 적대적 발언
- 2) 정부내 취재원에 대한 관리정책(브리핑제도, 취재원에 대한 접근제한, 사후보고 등)
- 3) 정부의 언론사(인)에 대한 소송제기
- 4) 소유주(경영주)의 압력
- 5) 광고주의 영향
- 6) 언론사내 상사로부터의 통제
- 7) 사회(운동)단체의 압력

문9) 000님께서는 노무현정부가 해당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소속 언론인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평가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1) 적극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문10) 000님께서는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한 정파를 편향적으로 지지 혹은 비판하는 방향으로 보도한다는 지적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1) 적극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문11) 000님께서는 다음의 매체들이 제공하는 뉴스를 각각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번호로 답해 주십시오.

-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2)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신뢰한다
- 5) 매우 신뢰한다

- (1) 서울발행 중앙일간지
- (2) 지방일간지
- (3) 공중파 TV
- (4) 케이블/위성 TV
- (5) 라디오
- (6) 잡지
- (7) 인터넷매체(인터넷상에서만 활동하는 매체)

문12) 000님께서는 방송의 유력일간지(조중동)에 대한 비평프로그램(미디어비평-MBC, 미디어포커스-KBS 등)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불공정하다
- 2) 대체로 불공정하다
- 3) 대체로 공정하다
- 4) 매우 공정하다

문13) 000님께서 12번 문항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셨다면 (1, 2 응답자)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제작실무자의 편향된 정치적 의도
- 2) 방송사 사장의 정치적 성향 반영
- 3) 시청자들의 요구 반영
- 4) 정부 여당의 영향
- 5) 방송노조의 압력

문14)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직후 중앙일간지나 방송사와는 인터뷰를 가지지 않은 채 특정 인터넷매체와 단독인터뷰를 가질 정도로 인터넷매체 활용을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000님께서는 노대통령의 적극적 인터넷매체 활용정책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1) 적극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문15) 000님께서 지방인론 육성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적극 지지한다
- 2) 대체로 지지한다
- 3) 대체로 지지하지 않는다
- 4) 절대 지지할 수 없다

〈교육 분야〉

문1) 000님께서 1년이 지난 현재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다음의 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 | |
|------------|-------------|
| 1) 매우 실패했다 | 2) 대체로 실패했다 |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성공했다 |
| 5) 매우 성공했다 | |

- (1) 투자 증대 등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 (2)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 (3) 사교육비 경감 대책
- (4) 대학입시제도 개선
- (5) 교육행정조직(교육부·교육청)의 개혁
- (6) 직업교육(실업계고교·전문대학)의 활성화
- (7) 지방대학의 육성
- (8) 대학 교육 및 연구 체제의 개혁
- (9) 특수 교육 특수교육(장애자 교육) 및 교육복지 확대
- (10) 교육의 개방(경제특구 외국학교 허용 등) 및 국제화 교육(외국어 교육 등)
- (11) 교육 정보화 추진(NEIS 등)

문2) 노무현정부가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하다고 생

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세 개**만 적어주십시오.

- (1) 평준화정책의 개선
- (2) 투자 증대 등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 (3) 교원인사제도의 개선(교사 평가제 개선, 교장 초빙제 확대, 수석교사제 도입, 등)
- (4) 교과서 질 개선
- (5) 제7차 교육과정의 정착
- (6)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 (7) 사교육비 경감 대책
- (8) 대학입시제도 개선
- (9) 교육행정조직(교육부·교육청)의 개혁
- (10) 직업교육(실업계고교·전문대학)의 활성화
- (11) 지방대학의 육성
- (12) 대학 교육 및 연구 체제의 개혁
- (13) 특수 교육 특수교육(장애자 교육) 및 교육복지 확대
- (14) 교육의 개방(경제특구 외국학교 허용 등) 및 국제화 교육(외국어 교육 등)
- (15) 교육 정보화 추진(NEIS 등)

문3) 000님께서 향후 4년간 노무현정부가 지난 1년과 비교하여 교육정책을 얼마나 더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잘못할 것 | 2) 대체로 잘못할 것 |
| 3) 보통 | 4) 대체로 잘할 것 |
| 5) 매우 잘할 것 | |

문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000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1) 고교 평준화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 2) 평준화 기초를 대폭 수정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토록 한다
- 3) 평준화의 현행 기본틀을 유지토록 한다
- 4) 고교 평준화를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

문5) 000님께서 우리나라 대학입시 제도를 어떻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1) 본고사 부활 등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 2)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수능 시험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3) 수능시험을 포함한 현행 입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 4) 대학교 평준화를 통해 입시경쟁을 없애야 한다
- 문6) 000님께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특구의 외국학교 설립 허용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 1) 전면 허용하여야 한다
- 2) 이들 학교에 국내 학생의 입학은 전면 금지하는 조건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 3) 이들 학교에 국내 학생의 입학은 일부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 4)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 문7) 000님께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육과 학생지도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신뢰하고 있다
- 2) 대체로 신뢰하고 있다
- 3) 대체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
- 4) 매우 신뢰하지 않고 있다
- 문8) 000님께서 우리나라 대학교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신뢰하고 있다
- 2) 대체로 신뢰하고 있다
- 3) 대체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
- 4) 매우 신뢰하지 않고 있다
- 문9) 000님께서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 관료들의 행정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신뢰하고 있다
- 2) 대체로 신뢰하고 있다
- 3) 대체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
- 4) 매우 신뢰하지 않고 있다
- 문10) 000님께서 다음의 인성 중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비교적 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세 개**를 골라 주십시오.

- 1) 동료와의 협동정신
- 2) 교사 및 어른에 대한 존경심
- 3)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
- 4) 투철한 국가관
- 5) 문제해결을 위한 인내심
- 6) 자신에 대한 자긍심
- 7) 타인(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 정신
- 8) 룰과 규율을 지키는 태도
- 9) 환경보호의식
- 10) 국제적 마인드 함양

문11) 000님께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떠한 인성에 대한 교육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세 개**를 골라 주십시오.

- 1) 동료와의 협동정신
- 2) 교사 및 어른에 대한 존경심
- 3)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
- 4) 투철한 국가관
- 5) 문제해결을 위한 인내심
- 6) 자신에 대한 자긍심
- 7) 타인(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 정신
- 8) 룰과 규율을 지키는 태도
- 9) 환경보호의식
- 10) 국제적 마인드 함양

문12) 000님께서 평소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2)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3)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4)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문13) 000님께서 현 정부에서 교원 노조와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 1)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가 교원노조에 억압적이다

- 2)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와 교원노조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 3)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가 교원노조에 중립적이다
- 4)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가 교원노조에 끌려다닌다

문14) 000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사회의 지도층을 양성하기 위한 엘리트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2)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3)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4)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문15) 000님께서는 다음 교육 정책 담당기구들이 어느 정도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하고 있다 2) 대체로 잘하고 있다
- 3) 보통이다 4)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 5) 매우 잘못하고 있다

- (1) 교육인적자원부
- (2) 교육청
- (3) 교원 노조
- (4) 교육과정평가원(수능 시험 등 담당)
- (5) 학술진흥재단(대학의 연구 지원 등 담당)
- (6) 대학교육협의회(대학평가 등 담당)